

04-18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노령화와 세대

2004. 2

연구기관: 동 아 대 학 교
연구책임자: 박 경 속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노령화와 세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2

연구기관: 동 아 대 학 교

연구책임자: 박 경 숙

목 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필요성	10
1. 고령화의 사회적 함의	10
2. 세대관계/세대격차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	10
3. 고령화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비전의 구축	11
제3절 연구내용	11
1. 고령화의 추이 및 사회적 함의	11
2. 세대관계/세대격차의 정치적 조망	12
3. 세대관계/세대격차의 경제적 조망	12
4. 세대관계/세대격차의 문화적 조망	13
5. 세대 연대의 새로운 기초와 세대공존의 방향 모색	13
제2장 세대갈등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고찰	14
제1절 문제제기	14
제2절 노년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혜택 받는 주요한 권력집단인가?	18
제3절 한국에서의 세대논의: 현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정권의 토대로서, 이제는 사회변동의 세력을 지니지 못하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세대인가?	34
1. 세대논쟁의 이론적 빈곤	38
2. 세대실재론: 과연 세대 자체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인가?	40
3. 세대경험과 세대의식	41

제 4 절 맺음말	44
제 3 장 노년기 가족관계와 일의 모순	45
제 1 절 문제제기	45
제 2 절 노년기 가족관계	47
1. 노인가구특성의 변화: 사회적 규범에서 상황적 전략으로의 변화? 세대간 고립 vs 독립성의 증가?	48
2. 세대관계; 도구적 관계의 유지, 정서적 연대의 약화	53
3. 효의 제도화, 핵가족이념과 확대가족 이념의 접변	57
제 3 절 노년기 일과 은퇴	61
1. 노년기=은퇴기?	61
2. 노년기 일의 의미	65
3.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이중적 대응	67
제 4 절 맺음말	69

요 약 문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전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제반의 사회 변동은 세대관계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 세대간 연대나 지원의 조건이 가족마다 차이가 크다. 압축적 경제변동은 세대간 경제적 기회의 차이를 심화시켰다. 전통과 근대, 탈근대적 가치의 혼재는 세대간 가치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생애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세대관계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의 모태가 되고 있다. 세대현상이 경제, 정치, 문화적 사회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일천하다. 바야흐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세대연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 연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추세 및 사회적 함의를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세대관계/세대격차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화사회에서 세대공존과 연대를 위한 과제들을 도출한다. 연구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세대관계/세대격차를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에서 연구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세대갈등을 완화 혹은 심화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비교사회입장에서 연구한다. 세대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세대간 이해차이가 정치화되고 사회갈등으로 표출되는 조건들을 규명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 아동 및 노인세대의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사회적으로 조망한다. 생애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변화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밝힌다. 신노사관계 및 고용유연화 과정과 함께 노동력의 고

령화가 고령노동의 수요,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조망한다. 문화적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 공유되고 있는 가치와 세대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가치의 특성을 조망한다. 연령분리 및 연령차별문화의 사회구조적 기원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세대관계/세대갈등의 원인, 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세대관계의 이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세대연대의 새로운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변화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크며, 노인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방향의 장기적인 비전 정립에 중요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세대현상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간 자원과 가치의 차이는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기 쉽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선진사회에서 노인이 세대갈등의 중심에 놓인 데에는 복지국가사회에서 생애의 제도화 특성과 관련된다. 복지비용의 주된 지출이 노인의 연금, 의료서비스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세대이전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부담’으로서 노인집단의 속성이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도 지닌다. 비록 근대화이론과 복지국가론이 노년세대의 지위를 빈곤과 부의 양극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양 부담’으로서 노년층을 귀속시키는데 두 접근은 일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도 노년층은 사회적 부양부담으로서 세대대체 및 세대형평성 논의에 중심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부담’론 이외, 압축변동의 맥락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한국적’ 세대론에 유의한다. 다른 아닌 문화, 정치 영역에서 불어지고 있는 세대론이다. 1990년대 이후 신문화현상으로서 ‘신세대론’이 제기되었다. 신세대는 빈곤의 경험이 부재하며 탈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20대~30대와 50대~60대 이상의 연령층사이 뚜렷한 정치태도 차이에 관심이 주어진다. 2002년 대선결과는 어떠한 사회계층 요인(직업, 계급지위, 교육수준 등)보다 지역과 연

령차이가 정치이념을 차별화하는 중심된 사회요인으로 드러났다. 연령집단별로 진보/보수, 친노무현/친이회창, 친한나라/친민주당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 세대론이다.

사회변동과 개인적 변화과정은 서로 얽혀 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가 존재한다. 코호트 경험과 성숙(고령화) 경험을 분리하고, 사회적 변화, 개인의 변화, 인간발달의 상호관계의 중층성을 설명하는 어려움은 크다.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대갈등론은 대부분 이러한 개념적, 방법론적 혼돈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기초적인 연령, 기간, 코호트 속성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 혹은 이의 코호트적 조작을 통해서 연령이 실제적 사회계층요인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연구자의 강한 문제의식이나 직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겠으나, 사용하는 개념의 명료함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과될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이러한 엄밀성이 결여된 가운데 정치적 태도, 투표행위, 사회정책, 경제적 운에서 세대갈등이 과장되고, 특정 연령층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동원될 위험이 크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가 세대/코호트, 연령집단간 갈등 기저의 실질적인 갈등의 구조를 은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세대론은 노년세대를 권위주의, 보수성으로 재단한다. 또한 세대간에는 단절적인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노년기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정체성, 의식 형성의 동학에 유의하고 있다. 주체는 끊임없이 과거, 현재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세대론은 태도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청년기의 중심된 경험이, 향후 세계관과 정치적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안정성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 상황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사고나 세계관이 안정적인 생활로부터의 탈골상황에서 흔히 이루어지기 쉬운 점에서, 은퇴, 가족,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변화는 정체성 및 그들의 정치, 사회의식에도 중요한 변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적이라면 세대의 어떠한 특성에 연유하는 것인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대부분의 세대론은 세대대체 혹은 세대단절적 설명이 주가 된다. 마치 운명적으로 출생에서부터 세대의 성패가 결정된 것처럼 인식된다. 비록 세대현상을 강조하

는 것이 모든 사회갈등의 중심을 세대로 환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세대단절, 세대분리논의에는 그러한 세대를 존재하게끔 한 구조와 상황이 쉽게 빠져나간다. 이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으로 이르는데, 과연 한 세대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사회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변화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세대연구자들은 젊은세대 중심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전제한다. 침예한 이념대립으로 묘사되는 세대갈등,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현현으로 파악되는 세대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대론의 중심에는 의식화된 대학생과 같이, 현 권력자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권력집단과 같이 엘리트집단이 놓여 있다. 사회변동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배회하고 있다.

가족중심성과 강한 노동 욕구는 현 한국 고령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성 이면에 모호성과 긴장이 크다. 가족 관계의 변화는 압축적이었으며 현재 다양한 가족관계가 공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 호혜적인 지원관계, 정서적 애착이 약하지만 물질적/도구적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가족관계, 그리고 물질적/정서적 고립의 징후도 크게 나타난다. 다양한 가족 관계의 공존은 서로 상호작용을 크게 하여, 가족 정체성의 혼돈을 더욱 크게 한다. 이러한 혼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적극적으로 가족과 개인생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족 가치를 복구하고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족 응집성에 대한 집합의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지금도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주요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족의 가치는 최근까지 공격당하지 않은 요새 안에 안치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이념의 보편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과연 현실적인 일과 재생산역할의 양립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부양역할의 사회화의 요구에 진지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재 선진사회의 다양한 복지정책 제도들이 연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례 연구가 미국, 일본 등 몇몇 사회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사회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의 효과, 효율성을 판단하여, 이들 사회구조의

특성을 무차별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식하는 결과를 조장하기 쉽다. 세계화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효율성, 재정안정화 논의는 한국사회에 전이되면서 복지 빈곤 상황을 면책하는 논의로 둔갑되고 있다.

노년기 정체성의 긴장과 물질적/사회적 배제는 생애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족, 노동관계의 모순구조에서 배태되고 있다. 상품화되고 분절화된 노동-가족화된 재생산 활동의 긴밀한 공조관계에서 한편으로 가족의 도구적, 물질주의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 소외가 심화되었다. 가족중심의 재생산 역할, 상품화된 노동은 국가 수준의 저비용 복지체제를 이끈 두 바퀴였으며 젠더불평등과 함께 노인 빈곤화와 연령주의를 조장한 불평등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가족과 개인은 탈제도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근대가족의 이념은 발전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제되었으며, 확대가족의 이념 또한 복지저비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제되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공존은 압축변동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공존한 것이 아니라, 가족중심의 부양 및 세대 간 지원관계를 강제한 제도적 권력개입에 의해서 강제되었고 급기야 생애규범으로서 보편심성으로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3. 전망과 이슈

정치, 사회, 문화적 지형에서 세대의 생애경험에 단절이 심한 것은 흔히 압축변동의 결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세대간 분리현상이 경제, 정치, 문화적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급격한 정치, 경제, 문화 변동속에서 생애가 너무나 쉽게 강제화되고 제도화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세대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수준에서 압축변동을 이끌기 위해 요구되었던 제도화된 생애 및 사회적 관계의 탈골현상이라고 사료된다. 현재의 세대 긴장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생애 제도화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가족긴장과 세대갈등의 해결사로서 공공권력의 개입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관계의 왜곡을 초래한 사회구

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활동적 노년기의 논의도 새롭게 각색된 생산성중심 논의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유능하고 활력 있는, 아직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체 어떠한 인력을 의미하는가? 우려되는 현상은 고령 노동촉진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노동에 눈을 돌리고 있는 업종은 주변적이고,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 저임금의, 열악한 고용조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노동의 연령 장벽이 지배적인 한, <70세 현역사회> 지향정책은 자칫 많은 빈곤하고, 소외된 고령자를 주변적 노동자로 몰아넣은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재의 고용불안, 노동시장의 연령장벽, 생산적 복지가 장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를 결코 기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중심 사회구조에서 억압되고 왜곡된 여가, 교육, 노동, 가족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과 부양역할을 구분하여 협의의 의미에서 생산성 비용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재생산의 공공재를 충분히 고려하는 관점에서 생산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적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노년기의 노동권을 보장하느냐, 복지권을 보장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어떠한 노동권이냐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나 가족주의와 같은 한국의 지배적인 가치가 여러 세대의 경계를 넘어 유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세대간에 지속되는 가치의 특성이 무엇이며 세대간 가치의 지속성을 조건짓는 사회구조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조망한다. 또한 세대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 고유의 가치성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분리 및 연령차별문화의 사회구조적 기원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에서 세대 연대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가족, 복지국가, 노동시장, 문화의 차원에서 세대연대의 새로운 규준과 세대공존 및 연령통합적인 생애, 가족, 사회적 관계의 과제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은 전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제반의 사회 변동은 세대관계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 세대간 연대나 지원의 조건이 가족마다 차이가 크다. 압축적 경제변동은 세대간 경제적 기회의 차이를 심화시켰다. 전통과 근대, 탈근대적 가치의 혼재는 세대간 가치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생애경험과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간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세대관계는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갈등의 모태가 되고 있다. 세대현상이 경제, 정치, 문화적 사회 불평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일천하다. 마야흐로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세대연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 정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 연구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추세 및 사회적 함의를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세대관계/세대격차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화사회에서 세대공존과 연대를 위한 과제들을 도출한다. 연구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에 따른 세대관계/세대격차를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에서 연구한다. 정치적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세대갈등을 완화 혹은 심화하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비교사회입장에서 연구한다. 세대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세대간 이해차이가 정치화되고 사회갈등으로 표출되는 조건들을 규명한다. 경제적 차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 아동 및 노인세대의 경제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사회적으로 조망한다. 생애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변화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밝힌다. 신노사관계 및 고용유연화 과정과 함께 노동력의 고

령화가 고령노동의 수요,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조망한다. 문화적으로, 여러 세대를 걸쳐 공유되고 있는 가치와 세대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가치의 특성을 조망한다. 연령분리 및 연령차별문화의 사회구조적 기원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세대관계/세대갈등의 원인, 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세대관계의 이론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세대연대의 새로운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변화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는 정책적, 실천적 함의가 크며, 노인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방향의 장기적인 비전 정립에 중요한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1. 고령화의 사회적 함의

선진사회에서 고령화는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21세기 고령화는 저소득국가가 직면한 주요한 사회변동의 특성을 띤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인구통제정책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 매우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화는 전통, 근대, 탈현대성이 혼재된 압축적 변동과정에서 전개되고 있고 경제성장에 커다란 제동을 걸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조건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제약을 안고 있다. 변화된 조건에 사회제도, 구조, 가치가 조응하지 못하는 불일치의 문제가 노정되어 있다. 개인, 가족, 사회 수준에서의 갈등 및 성장과 복지사이의 긴장은 국가체제의 정당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에 속한다. 1960년대의 인구통제정책은 이제 출산장려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 동안 방치되었던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세대연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2. 세대관계/세대격차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

세대관계가 크게 동요되고 있다. 세대간 연대나 지원의 조건은 가족마다 매우 다

양하다. 경제성장과 위기 국면의 압축적 변화는 개인이 생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제적 행운과 불운에 있어 세대차이를 심화시켰다. 집단주의/개인주의, 권위주의/탈권위주의, 가족주의 등 상이한 가치관의 공존은 세대간 상호 영향과 갈등으로 나타난다. 생애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는 정치적 입장의 세대간 경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요컨대 세대관계는 사회계층화 및 사회갈등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세대현상이 경제·정치·문화적 불평등에 중요한 함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세대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현상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지식 수준은 일천하다.

3. 고령화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비전의 구축

압축적 변동과정에서 장기적인 사회변동의 비전이나 청사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많은 정책들이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험되었고 심각한 시행착오의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장기적 비전과 청사진의 구축이 즉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실천에 못지 않게 절실하게 요청된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도전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에 총체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고령화의 영향과 원인에 대한 종합적이며 구조적인 이해가 결여된채 단편적인 문제나 현상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실질적인 원인과 해답을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또한 사회모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노인복지와 세대연대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제3절 연구내용

1. 고령화의 추이 및 사회적 함의

고령화의 역사적 의의를 탐구한다. 전세계적 고령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사회의 고령화 특성을 비교한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저소득 국가의 대응조건

을 비교한다. 고령화에 따른 도전을 개인, 가족, 제도, 사회 및 국가의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한다. 세대관계는 가족, 코호트, 생애주기, 역사적 시간 등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형성된다.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상호연관성 및 고령화와 세대연대의 관계는 사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현상에 대한 구조적이며 비교사회적 접근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비교사회적 입장에서 한국사회에서 고령화와 세대연대의 관계의 특수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가족수준과 사회수준에서 세대관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에서 세대관계는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2. 세대관계/세대격차의 정치적 조망

고령화와 복지국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체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커질수록 세대간 갈등의 수위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복지국가의 관계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다. 동일한 고령화 수준에서도 복지 지출에 차이가 크다. 또한 동일한 지출 수준에서도 복지국가가 사회 불평등이나 계층화 정도에 개입되는 정도는 상이하다. 결국 어떠한 맥락에서 복지국가가 세대갈등을 완화 혹은 심화하는가를 조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한국의 세대갈등은 각 세대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에 따른 가치관 및 경험의 차이와 관련이 깊다. 세대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세대간 상이한 이해가 정치화되고 사회갈등으로 전환하게 되는 조건들을 규명한다.

3. 세대관계/세대격차의 경제적 조망

지난 몇 십년간 한국사회가 이룬 고도의 경제성장은 많은 개인에게 물질적 풍요를 안겨다 주었다. 절대적 빈곤계층의 비중도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 가운데 빈곤화된 계층이 존재한다. 노인의 빈곤화는 도시가구 및 일반 근로자가구

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심화되었다.

또한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지금까지 소득분배구조의 왜곡현상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심화된 소득 불평등이 아동 및 노인세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론적으로, 비교사회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생애를 통해 소득격차가 변화되는 다양한 조건을 밝힌다.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의 유연화과정에서 장년층, 고령층의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노동권의 문제가 노동-사용자 관계 뿐 아니라 노동-노동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신노사관계 및 고용유연화 과정과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가 고령노동의 수요 및 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조망한다.

4. 세대관계/세대격차의 문화적 조망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나 가족주의와 같은 한국의 지배적인 가치가 여러 세대의 경계를 넘어 유지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세대간에 지속되는 가치의 특성이 무엇이며 세대간 가치의 지속성을 조건짓는 사회구조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조망한다. 또한 세대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대 고유의 가치성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를 규명한다. 연령분리 및 연령차별문화의 사회구조적 기원을 밝힌다.

5. 세대 연대의 새로운 기초와 세대공존의 방향 모색

정치·경제·문화적 차원에서 세대 연대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한다. 가족, 복지국가, 노동시장, 문화의 차원에서 세대연대의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도출한다. 세대공존 및 연령통합적인 생애, 가족, 사회적 관계의 과제를 밝힌다.

제 2 장 세대갈등에 대한 비교사회론적 고찰

제 1 절 문제제기

노년 및 세대문제는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하나는 근대화이론의 관점에서 노년세대의 지위 변화를 설명하는 접근이다. 주로 노년세대는 산업화, 도시화, 가족변동의 결과,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접한다는 주장이다. 저소득 혹은 후진사회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주를 이룬다. 주로 노년층에 대한 이미지는 부양에 의존한 계층이라는 사회적 동정을 수반한 그러나 사회적 부양부담으로서 인식된다. 주로 사회변동에서 뒤쳐진 구세대로 표상된다.

한편 선진사회에서 노년층에 대한 논의는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논쟁적인 쟁점은 현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실현할 수 있는 있는 주요한 사회적 세력인가 여부이다. 한편에서는 현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이라고 주장한다. 노년기의 빈곤위험은 경제성장, 복지국가의 은퇴소득보장의 제도적 안정망의 결과 크게 감소되었다. 절대적으로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집단으로서,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으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파악한다. 절대적 파괴기가 제한된 상황에서 더 많은 몫이 노년층에게 부당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흔히 사회정책의 지출을 통제하는 이해를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대간 형평성 논의는 주로 복지정책의 개혁과정에서 흔히 제기되는 쟁점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년층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이 과장됨으로써 노년층이 사회 불평등이나 리더십의 실패를 무마하는 정치적 희생양으로 바쳐지는 사회정치적 맥

락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또한 총량적 수준에서 노년의 사회적 지위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그 내부의 이질성이 상당히 큼에 유의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세대간 인지하는 이해나 갈등이 정도가 심화, 혹은 완화되는가, 그리고 그 원인을 무엇인가에 대한 상당한 연구들을 지도하였다. 한편에서는 불평등한 경제적 부담의 가중이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논의가 있다. 각종정책에 대한 연령집단들의 이해는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이해적 관점에서 세대갈등을 진단하는 논의도 있다. 반면에 세대간 상호 인정을 강조하는 논의도 존재한다.

세대갈등의 원인과 그 변화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변화가 한편으로 개인의 특정한 생애단계에서 발생한 구체적 요구나 이해와 관련될 수 있으며(aging effect), 특정한 정치, 사회, 문화적 경험에 노출의 장기적 효과(cohort, generation effect), 혹은 그 상호작용에 관련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부단한 연구노력이 이러한 연령동학의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에 주어지고 있다.

세대논의는 한국사회에서 많은 학자들이 부단히 고심해온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노년층은 세대논의의 중심에 놓여있다. 한편으로 근대화이론에서 복지국가론으로 이어지는 부양부담접근에서 제기되는 세대형평성 논의가 한국에도 전개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현 시점까지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근대화, 가족변동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소외 받게 된 구세대의 입장이 지배적이다. 낮은 교육수준, 빈곤, 전통적 사고와 가치관에서 급변하는 주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으로 인식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소외된 구세대의 이미지와 더불어, 사회적 부담으로서의 이미지가 가세한다. 이에는 무엇보다 고령화와 복지국가의 요인 효과가 크다. 급속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서 부각되면서, 노인집단은 결코 낙관적이지 못한 변화가 함축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이 집중된 일차적 '문제' 집단으로서 표적되었다. 어떻게 많은 노인인구를 사회적으로 부양할 것인가, 빈곤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등 주된 논의는 피부양층으로서의 노년층을 귀속시킨다. 사회적 부담론은 세대간 형평성

논의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세대간 형평성은 연금개혁의 근거로서 지적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조정을 둘러싸고 세대간 일자리 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경제활동인구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구조에서 현역인구의 과중한 부양부담을 진단한다.

위의 접근과는 구별된 한국에서 고유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대논쟁은 현 노년세대의 문화, 정치적 신념과 가치지향과 관련된다.

세대갈등과 세대 차이는 우리에게 이미 식상하리만큼 널리 회자되고 공감하는 사회현상이다. 비단 작은 연령계층사이에도 문화,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한다.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는 이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가치의 갈등이 깔려있다. 가정, 직장,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연령집단들 사이의 가치, 문화의 장벽은 크다고 인식된다.

세대의 문제는 정치영역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2002년 대통령 총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연령집단별 지지하는 대통령후보가 뚜렷하게 갈리는 것이었다. 일반 여론의식조사에서도 미군, 북한, 통일, 지지정당 등 한국의 정치사의 굵은 획을 그었던 주요한 정치적 상징에 대한 태도에 연령차이가 큼을 보여준다. 여론조사의 통계는 노년층을 정치, 문화적으로 보수집단으로 요약한다. 선거 때마다 인물보다는 무조건 '보수정당소속'을 찍는다고 인식된다. '젊은 층이 상당히 부동하는 표'로 집계되는 반면, 그들의 정치관은 상당히 뿌리 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정치, 문화적 영역에서의 연령분리현상은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지적, 정치적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세대론에 그 답을 기대하는 분위기를 고무시켰다. 세대론의 중심된 가정은 세대대체론이다. 세대란 거시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동시대적으로 경험한 집단으로 정의된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한국사회는 격동의 세기를 경험하였다. 내 삶이 역사라고 흔하게 듣는다. 샌드위치 세대도 모든 세대에서 자신 세대의 경험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말로 이용된다. 모든 개인은 앞선 세대와 후세대와 차별되는 고유한 세대경험을 하였고, 사회변동은 세대대체의 다름 아니라고 이해된다.

세대론은 세대 고유의 경험과 가치관은 세대연대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 동시대적 경험이 세대의 고유한 의미 원천이 되고, 이후 그들의 중요한 세계관, 가치관 형성을 주도한다고 가정한다. 특히, 청년기는 외부의 가치에 흡수력이 매우 커서 이 시기 노출의 효과는 장기적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사회·심리적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환경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나아가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한다. 한번 각인된 ‘상징적’ 가치는 생애를 통해 변하지 않고 고정된 자아의 세계관이 된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노인집단의 정치, 문화적 보수성에 대한 많은 논의는 이러한 세대대체론과 인지발달론의 결합의 여러 번역된 접근들이 주를 이룬다.

세대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구조와 행위의 결합에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매력에 있다. 구조론적 설명이나, 행위론적 설명에 반해, 사회변동과 개인의 생애사이의 길항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관점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수준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세대현상은 사회변동의 복합적 구조의 관계에서 체화된 생애, 의식, 정체성의 문제이다. 생애경험과 생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원과 기회는 상당한 집단적 현상으로 표출되는데 유의한다. 개인의 주관적이며 직접적 경험이 어떻게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유의한다.

세대론은 급격한 사회변동에 수반된 결과라 할 수 있는 세대간의 물질, 비물질적 격차에 유의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팽배되어 있는 갈등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세대 연구의 의의는 크다. 급속한 사회변동은 생애와 세대를 통해 분배된 기회/자원의 차이를 크게 할 수 있다. 고유한 정치경험은 집단의식으로 표출되어 정치적 갈등으로 이행될 수 있다. 연령집단간 정치의식의 차이는 흔히 연령집단내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계층적 차이를 상쇄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클 수 있다. 한마디로 세대론은 연령이 중요한 사회계층화의 차원이 될 수 있으며, 그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세대논쟁은 지나치게 세대중심적 사회변동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제기된다. 집단적 경험을 상징하는 정치, 문화, 경제적 사건

들이 임의적 기준으로 유형화되고, 이러한 경험에서 세대의식, 가치관, 정치의식을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 세대관계보다는 세대의 객관적 위치에서 세대의 의식과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대가 사회적, 정치적 힘으로 부각되면서, 사회변동의 구조, 행위 요인은 세대로서 대체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치기 힘들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교사회적으로 세대문제가 등장하게 되는 고유한 사회맥락을 비교해봄으로써 세대형성과 사회변동에 대한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세대의 역사적 구성을 강조하고, 관계적 입장을 지향한다. 중장년층, 혹은 생산층 중심의 시각에서 주도된 세대, 세대간 형평성 논의를 좀더 균형적 입장에서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절에서는 선진사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세대논쟁을 조명해보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 권력집단으로서 노년층의 부상과 관련된 상반된 입장과, 태도·이해에 있어 연령집단간 차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한국에서 노년층을 둘러싸고 세대논쟁이 제기되는 맥락과 주된 이론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제 2 절 노년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혜택 받는 주요한 권력집단인가?

선진사회에서 세대론은 노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의 경제적 부의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나 특정 정책에 대한 연령집단별 선호하는 정책이 차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할 수 있는 동원력, 그리고 다양한 자원의 세대간 분배에 대해서 세대가 인지하는 갈등정도 등 다양한 세대현상에 주목하고 있다.¹⁾ 이렇게 노년세대가 현재의 정치, 경제, 영역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나 자원이 형평한가에 대한 상이한 평가에 비롯한다.

1) Kenneth Ferraro. 1990. "Group Benefit Orientation toward Older Adults at Work? A Comparison of Cohort Analytic Method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 45/5: s220-227.

미국사회 고령층의 생활수준은 지난 세기 이래 꾸준히 향상되었다. 오히려 최근에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자원을 지닌다는 고발이 이어진다. 롱맨(Longman, 1987)은 미국사회의 세대간 긴장을 강조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기 노인세대에게 막대한 소득보장을 제공하였고, 또 그 자녀세대들이 보상해줄 것을 기대한다. 결과는,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의 전쟁이라고 말한다.²⁾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 수와 이에 따른 서비스 증대는 전체 사회의 경제활동과 세대간 형평성을 제약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한 주장들은 최근 몇 십년동안 반복된 불규칙적인(disordered) 코호트 흐름을 강조하는데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복지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려 깊은 소리가 크다(Easterlin, 1987)³⁾ 사회 전체의 부가 노년층의 지갑으로 모이는 데에는 자신들의 이해에 유리한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고령층은 보다 많은 연방, 의료지원을 선호한다고 한다. 국민선거자료를 이용하여 캠프벨과 스트라트(1981)은 1956년에서 1978년 기간에 걸쳐 고령자는 일관되게 정부의 의료보호 보험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⁴⁾

연령집단간 자원분배의 차이나 갈등을 설명하는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세대 혹은 코호트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세대현상은 특정 세대의 정치화, 경제적 운, 사회복지 혜택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세대관계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경제적 운의 차이나, 정치적 권력 자원의 차이, 이해의 차이는 그들이 속해있는 세대 혹은 코호트적 위치에서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에서부터, 복지국가, 권력자원, 정치문화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까지 다양하다. 이론적 관점의

2) Longman, Phillip. 1987. *Born to Pay: the New Politics of Aging in America*. Boston: Houghton Mifflin.

3) Easterlin, R. A. 1987. *Birth and Fortune: The Impact of Numbers on Personal Welfa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4) Campbell, Angus and John Strate. 1981. "Are Old People Conservative?" *the Gerontologist* 11:112-117.

한 축에서는 세대갈등의 인구학적 기초를 강조한다. 세대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른 아닌 코호트의 크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출생시기가 동일한 코호트와 관련된 중요한 인구 특성이 바로 코호트의 크기이다. 개인이 속한 코호트의 상대적 크기는 생애의 자원과 기회의 폭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코호트의 크기가 긍정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입장에 차이가 있다. 지나친 인구크기가 경제발전과 개인의 자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맬더스 고전 경제학의 주된 가설에 속한다. 산업화 이전까지 인류의 긴 역사상 인구가 정체되었던 것은, 전쟁과 기근 등의 억압적 기제를 통한 자기 조정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맬더스 인구론은 저소득국가의 인구통제정책의 주요 이론적 근거로서 기여하였다. 경제성장과 관계없는 도시화, 인구폭발은 발전의 도약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맬더스론은 개별 사회의 특수성을 서구의 경험으로 지나치게 일반화하며, 인구현상의 사회구조적 배경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세대현상의 인구학적 기초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논의는 이스틀린에서 확인할 수 있다(Easterlin, 1987). 출생과 운명(Birth and Fortune) 책의 서문에서,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미국 사회의 문화에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넘어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가 속한 코호트의 운명임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 사회에서 출생코호트의 인구크기가 장시간을 거쳐 베이비 붐과 역 붐의 시기를 반복하였음에 주목한다. 1946년에서 1974년 베이비 붐 세대는 출산률이 높은 시기에 태어난 세대이다. 베이비 붐 코호트 세대의 생애과정을 추적해보면, 코호트 크기가 그들의 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경제침체, 높은 실업률에 따른 경제적 불안은 그들의 가족생활의 안정을 위협하였다. 그들의 경제적 운은 노년기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 많은 은퇴인구의 소득보장에 대한 연방정부나 주의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며, 현역 노동자층에게 과중한 부양부담을 안김으로 인해 세대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스틀린은 코호트의 크기를 경제적 기회나 개인의 생애에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코호트크기와 경제순환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생애사이의 일반화를

추구하였다. 그의 논의는 한편으로 인구영향에 대한 상당히 큰 반향과 큰 독자층을 마련하였지만, 실제 그러한 관계가 미국 아닌 다른 사회에서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의 논의가 세대현상의 인구학적 기초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떻게 코호트의 경험이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인과적 설명이기 보다는 결정론적인 관점을 지닌다. 또한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코호트의 힘이 개인 생애를 구조화하는 메카니즘에 대해서도 역시 구조론적 환원주의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프레스톤의 논의는 인구크기 자체의 효과보다는 산업구조와 사회정책 변화와 같은 요인에서 다른 연령층의 상이한 운명을 강조한다. 프레스톤은 한 논문에서 유소년층과 고령층의 경제적 지위 변화를 인구, 복지국가, 산업구조의 변화의 관계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Preston, 1984).⁵⁾ 그는 1960년에서 1980년 사이 두 주요 비경제활동인구인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안녕의 전환 관계를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빈곤율, 사회보험의 비중(현물, 의료보험, 의료보호), 주택정책, 자살률, 사회보호정책(AFDC, Head Start, food stamps), 건강, 재정, 교육부, 노년부 재정 변화, 공공교육의 질, 학업성취능력, 의료보건, 사망률 변화, 등의 총체적 사회변화를 증거로, 노인의 경제적 지위 상승한 반면 아동의 지위는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고령자 세대의 지위 상승을 결과한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가족, 산업, 국가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은 가족안정성을 위반하는 경제적 동기 증가, 개인주의 규범의 확산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이해 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연령별 주요 정책 심각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노인은 그들의 수적 이점을 보다 많은 정치적 결정에의 수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중요한 정치적 집단으로 기능하였다는 것이다. 1975년의 연령차별주의 폐지에 관한 강령의 통과를 고령자

5) Preston, Samuel. 1984. "Children and the Elderly: Divergent Paths for American Dependents." *Demography* 21:435-58.

집단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로서, 이후 미국사회에서 세대갈등은 더욱 심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교육 산업은 쇠퇴하고, 교육인력 또한 쇠퇴하는 악순환의 과정에 있는 반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는 막대함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세대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산업, 정치적 이해 관계의 변화는 고령자집단의 절대적, 상대적 인구크기의 증가와 밀접히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고령자의 정치적 세력화 정도는 그 연령집단의 크기가 클수록, 국가의 복지기능이 강할 때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팜펠은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권력집단으로서 노년의 위상은 차이가 큼을 강조한다. 고령화, 복지국가, 노인세대의 경제적 지위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⁶⁾ 정치적 개입은 사회발전과 함께 사회불평등 구조를 변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지난 몇 십년간 연령구조의 변화는 복지국가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여러 국가사례를 비교하면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비 지출은 인구구조, 민주주의, 이해집단, 계급 조직 등과 정의 관계가 있다. 무엇보다 고령자 복지비용의 가장 큰 요인은 인구 집단의 크기라고 밝힌다. 결론적으로 여러 선진산업사회에서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자로서 고령자의 지위 변화에 주목한다. 고령자 집단은 가족, 지역사회에 소속되었던 작은 집단에서, 공통의 연령에 기초한 이해를 가진 정치적, 인구적으로 큰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세력화는 무엇보다 고령자의 인구집단의 크기 증가에 기인한다고 강조한다. 이 밖에 고령자를 위한 복지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투표율, 정당경쟁, 실업률, 경제생산, 서비스 물가 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고령자 세대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세력화는 인구구조변화, 산업화, 복지국가의 복합적인 결과로서 해석하고 있다. 고령자의 정치적 힘, 이해집단의 이해를 조직하여 중요한 정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민주주의 환경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Pampel, Fred. 1989. "The Welfare State: Some Neglected Considerations." pp.1~21 in Pampel, Fred and John Williamson. ed.s, *Age, Class,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일본에서도 고령화와 복지제도 개편상황에서 세대형평성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중심된 논지는 세계화, 변화된 경제, 고용구조에 대응하여,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역세대는 과중한 부양부담을 떠 앉게 된다는 것이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일본의 노동제도는 전형적인 세대간 계약을 전제로 조직되었다. 종신고용시스템에서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그 생산성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그 생산성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세대계약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장기적 고용의 댓가로 가급적이면 경력일자리를 조기에 퇴직함으로써 세대간 일자리 이전을 보장한다는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분위기에서 고용불안의 심화는 종신고용이 전제한 세대간 일자리 공유의 원칙을 크게 흔들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일자리에 대한 세대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복지제도는 세대간 부의 전이과정(generational wealth flow)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 연금의 재원확보는 부과방식(pay as you go)에 기초한다. 현 고령자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현 근로자의 기여에 의해 충당된다. 이는 또한 의료비용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의료비용은 현 임금근로자, 가족종사자, 농업인이 가입한 의료조직에서 확보된 노인의료기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간 부의 전이는 고유한 인구, 경제, 문화적 배경에서 성립하였다. 인구 구조에서, 빈곤하고, 아픈 노인을 보호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히 젊은 연령 구조와 조응하였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적자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신고용에 기초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와 조응하였다. 문화적으로, 가족주의의 가치에 의해 노부모와 은퇴자에 대한 지원을 사적영역에서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된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세대간 이전의 조건이 크게 변하였다고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하의 가구주가 지불하는 세금이나 사회보장비는 그들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수혜액보다 크다고 지적한다(후생성, 1996). 이와는 반대로 60 이상의 가구주는 그들의 생애 기여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65세 이상이 받는 이전 소

득액은 불균등하게 많으며, 세금 부담은 30~64세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된다(Suzuki, 1999).

전후 경제 성장기 이래 일본 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신장하였다. 평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전혀 빈곤하지 않다. 65세 이상 가구주의 가구 소비수준은 전체 가구 소비수준의 80%에 이른다(후생노동성(전 후생성), 1999). 노인가구의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고려하면, 개인당 소비수준은 비노인 수준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는 일반 가구의 두 배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노인 집단내부의 불평등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생애를 통해 노동시장, 사회정책, 가족생활의 차이가 축적되면서, 노인 집단 내부에 변이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논의들은 복지국가, 이해집단의 정치, 인구고령화, 경제발달 등의 조건 속에서 노년집단의 세력화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빈스톡은 고령자의 사회적 세력화 논의가 흔히 정치적 희생양의 목적으로 조작되는 맥락을 지적한다.⁷⁾ 그는 미국노인에 관한 정치적 쟁점은 오랫동안 연령차별주의에 의해 구조화되었다고 강조한다(Newgarten, 1970). 이질적인 집단에 같은 특성, 지위, 기호를 인위적으로 동질적인 ‘노인’으로 귀속시켰다고 비판한다. 미국사회에서는 1930년대의 타운젠드 운동에서 1970년대까지 노인에 대한 몇 개의 정형화 혹은 정리(axiom)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정적인 고정관념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인은 가난하고, 유약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며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은 정치세력으로서 상대적으로 무력하므로, 노인의 세력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와야 한다. 셋째, 노인은 그들의 불리가 강제적 은퇴, 쇠약, 장애와 같이 젊은이 중심 사회의 편견에 의해 조장되고 있는 보호를 받아 마땅한 빈곤층 (deserving poor)이다. 미국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만족시키며, 풍요로운 미국사회가 노인을 위해 더 하지 않아야 하는

7) Binstock, Robert. 1983. 1983. "The Aged as Scapegoat.." *Gerontologist* 23: 136~143.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1978년 이후, 카터 행정의 중반이후, 이러한 연령명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직접적인 충격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사회보장위기였다. 메디케어, 정치연설 공공정책연구, 학자들의 서술에서 새로운 정리를 발견하게 된다; 노인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며, 노인은 그들의 수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유력한 정치집단으로서 자기 이해에 따라 투표한다. 인구변화 때문에, 노인은 더 많아지고, 정치적으로 강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이미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미래 미국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가할 것이다.

빈스톡은 이러한 새로운 정리는, 노인을 희생양으로 세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노인은 경제, 정치적 좌절 책임에 모든 비난을 받았다. 그는 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주된 논리는 잡지성 사고(tabloid thinking)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각 정리에는 사실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으며, 심지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인이 희생양으로 조작된 기원은 1930년대의 동정적 연령차별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치적 희생양의 결과는 정치적 리더십의 결핍, 공공정책의 실패, 경제적 비효율 등의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분명한 결과가, ‘세대간 갈등’을 촉발한 점이다. 1980년대 복지삭감 과정에서 감소된 파이를 두고 뜨겁게 진행되었던 아동을 둔 가족과 노인집단의 로비는 결국 노인의 승리로 끝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70세 이상에서는 정치권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제안이 제기되는 등 세대갈등이 첨예화되었다.

지나치게 세대갈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의 문제제기는 가족연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벵촌은 가족수준에서 세대관계의 변화를 인구구조의 변화와의 긴밀한 관계에서 분석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 고령화, 저출산으로 요약되는 인구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는 ‘beanpole family structure’ 모형으로 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세대관계는 중첩되고 경계의 모호성이 큰 특징을 지닌다. 가족해체, 세대고립논의에 반하여, 그는 ‘지난 20세기 후반 서구 산업 사회에서 발생한 것

은 가족구조의 감소, 쇠퇴가 아니라, 19세기 가족생활에서는 드물었던 친족구조, 기능의 다양성과 이질성이다'라고 주장한다(Bengtson, 1993; 16).⁸⁾

페라로는 노동에서의 연령집단갈등 논의가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페라로는 18세 이상 미국인의 대표확률표본을 이용하여 1975년과 1981년 고령자고용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 유의미한 사회변화의 하나로서 정치적 요인이 존재하는데, 1978년 고령자고용에 관한 정책개정(ADEA,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통해 대부분이 직장에서 70세까지 연장되었고, 연방공무원의 경우 정년제가 폐지되었다. 이는 연령이 아닌 능력에 따른 고용을 강제하는 법으로서 고령자 고용에 대한 관용도와 지지적 태도를 증가시켰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기회와 관련하여 집단이해를 반영하는 문항으로서 정년제, 젊은층에게 일자리양도, 실업의 심각성, 연령차별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이해가 별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고령자의 노동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숙(maturation) 설명에서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집단이해에 대한 경험적 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다 최근의 연구에 기초해보아도, 세대관계의 긴장논의는 별로 지지되지 못한다. 사회보장, 의료보험에 대한 태도조사에서는 세대간에 상호 존경과 배려의 충분한 증거가 확인된다. 긴장의 원인은 연령이 아니라 사회계급이라고 주장된다. 가족 책임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복지에 대한 우려가 고령자에 대한 우려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세대갈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고령의 집단성을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많은 노인 스스로 고령자와 동일시하지 않는다.⁹⁾

8) Bengtson, Vern.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in Vern Bengtson and Andrew Achenbaum. (eds.), *The Changing Contract Across Generation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pp.3~24.

9) Binstock, Robert. 1983. "The Aged as Scapegoat." *The Gerontologist* 23:136~143.

Foner, Anne. 1974. "Age Stratification and Age-Conflict in Political Lif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187~196.

연령계층과 정치선호와 관련하여, 사회는 노동기회를 포함하여 개인의 권리를 지원 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고 주장한다. 최근 코호트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시민권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모든 코호트는 높은 수준의 관용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용이 보다 젊은 세대에서 더욱 크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태도에서 연령차이의 원인은 고령화 자체가 아니라, 사회변동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한편 세대간 갈등에 유의하는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메릴실버스티인과 그 동료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의 노년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¹⁰⁾를 강조한다. 1986년, 1990년, 1997년 샘플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 프로그램에 지지도가 시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의 기제로서 코호트간 변화가 코호트 대체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주장한다. 보다 보수적인 문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코호트에 의해 대체된 결과가 전체태도 변화를 주요하게 설명한다고 주장한다.¹¹⁾

이들 연구들은 노인의 집단이익지향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동화과정을 통해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고령화(aging)로 일컬어지는 연령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코호트 효과이다. 전자에서 연령집단이해는 성숙(maturation)의 효과와 상관이 깊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각 생애과정에서 요구되는 이해나 욕구가 변한다. 노년기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노년기의 생애단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욕구에서 비롯된 이해라는 것이다. 노동기회를 둘러싼 연령집단간 갈등도 이러한 연령효과로 설명한다. 일자리가 제한된 가운데,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며

Palmore, Erdman. 1978. "When Can Age, Period, and Cohort be Separated?" *Social Forces* 57:282-295.

10) Silverstein, Merrill, Joseph Angelelli, and Tonya Parrott. 2001. "Changing Attitudes toward Ag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80s and 1990s: A Cohort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 56B:s36~s43.

11) Glenn, N. D. 1976. Cohort Analysts' Futile Quest: Statistical Attempts to Separate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900-904.

Firebaugh, G. 1997. *Analyzing Repeated Surveys*. Thousand Oaks, CA: Sage.

젊은 층은 일자리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젊은층과 고령층의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크다. 일자리에 대한 연령집단간 갈등의 우려는 또한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사회문화적 요구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여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젊은층 관점에서도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저연령계층은 노인정책에 덜 지지적일 수 있다. 이와는 상충되어 보험관점에서 저연령층은 자신의 노년기의 욕구를 기대하므로 젊은층도 노년층만큼이나 노인정책에 지지적일 수 있다.

연령계층별 고유한 정치적 태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집단수혜관점(group benefit orientation)논이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집단에 따라 정치적 선호가 구별, 차별화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한 접근으로서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 미칠 정치적 결과를 기초하여 자신의 정치적 관점을 정립한다는 논의이다(Campbell, 1962; Converse, 1964) (Hudson and Strate(1985). 연령과 관련하여, 65세에 들어간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를 지지하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²⁾

한편 코호트 대체효과론은 각 코호트는 젊은 시기에 노출된 경제, 문화, 역사적 경험에서 이데올로기가 결정화(구조화)되어 이후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세대간 가치갈등은 젊은 코호트에 의해 기성 코호트의 대체과정에 결과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기는 사회적 가치에 흡인력이 큰 시기라는 것이다. 소위 각인기의 청년 가설(Alwin, Cohen, & Newcomb, 1991; Clausen, 1993; Elder, 1994)은 코호트간 가치변화를 설명하는 주된 논의가 되고 있다. 글랜(1980)은 연령에 따라 태도가 안정적임을 강조한다. 생애 초기, 역사적 각인이 생애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된

12) Campbell, Angus. 1962. "Social and Psychological Determinants of Voting Behavior." in Wilma Donahue and Clark Tibbits eds. *Politics of Ag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Converse, Philip.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Hudson, Robert and John Strate. 1985. "Aging and Political Systems." in Robert Binstock and Ethel Shanas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2nd ed.).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다고 주장한다. 올윈, 크로스닉¹³⁾은 사회변동과 개인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가설들을 검토한다. 고령화-안정성(Glenn, 1980),¹⁴⁾ 세대계승, generational succession, (Carlsson and Karlsson, 1970; Mannheim 1952; Ryder 1965), 세대유지, generational persistence(Sears 1981, 1983, 1987) 가설들에 따르면¹⁵⁾ 개인의 태도는 초기 청년기에 사회화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이후에는 변화에 상대적으로 저항적이라는 것이다. 사회, 정치적 상황이나 공식적 사회화 경험에 있어서 세대간 차이는 잠재적으로 다른 태도관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세대 혹은 코호트간 차이는 코호트계승과정, 신규코호트에 의해 고령코호트의 대체에 따라 사회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태도 안정성이 모든 태도성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시어스(Sears, 1969, 1975, 1981, 1983, 1988), 상징의 정치이론을 개진하는데, 사회정치적 태도는 다양한 정치적 상징과 ‘감성적’으로 연결되어 발전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다. 태도는 매우 상징적인 수준에서 비상징적인 수준으로 연속선을 따라 내용의 범위가 있다. 두 태도는 안정성에서 차이가 있다. 상징적

13) Alwin, Duane, Jon Krosnick. 1991. "Aging, Cohorts, and the Stability of Sociopolitical Orientation over the Life Sp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 169~95.

14) Glenn, N. 1980. "Values, Attitudes, and Beliefs." pp.596~640 in *Constancy and Change in Human Development*, ed by. Orville G. Brim and Jerome Kaga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5) Sears, David. 1981. "Life-Stage Effects on Attitude Change, Especially among the Elderly." pp. 184-204 in *Aging and Social Change*, edited by Sara B. Kiesler, James Morgan, and Valerie Oppenheimer. New York: Academic Press.

_____. 1983. "The Persistence of Early Political Predisposition: The Roles of Attitude Object and Life Stage." pp.79~116 in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ed. by Ladd Wheeler, Beverly Hills, Calif.: Sage.

_____. 1987. "Implications of the Life Span Approach for Research on Attitudes and Social Cognition." pp.17~60 in *Life-Span Perspectives and Social Psychology*, ed. by Ronald Abeles. Hillsdale, N.J.: Erlbaum.

_____. 1988. "Symbolic Racism." pp.53~84 in *Eliminating Racism: Profiles in Controversy*, edited by P.A. Katz and D.A. Taylor. New York: Plenum.

태도는 청소년기, 강한 정서적 기초에서 발달하며 정보, 인지적 내용은 적은 편인 것과 대조적으로 비상정적 태도는 성인기에 지식습득과 정보통합의 결과로 형성된다. 상징태도는 시간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변화에 저항적인 반면, 비상정적 태도는 설득적 주장이나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 변하기 쉽다.

올윈 등은, 1956-1958-1960과, 1972-1974-1976년에 걸쳐 정당지지태도를 비교하였는데 각인기와 고령화 안정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지지도의 방향과 강도를 반영하는 요소를 분해해보면, 강도의 안정성은 고령층에서 감소하지만, 방향의 안정성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거나 안정적이다. 정치적 사회화의 지배적 모형은 태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재검토될 필요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치, 경제, 인구, 가족, 복지국가 다양한 주제를 걸쳐 제기되는 연령차이 및 세대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연령이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개념의 인식론적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 연령 자체는 너무 많은 요인과 그 상호작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변수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많은 노년학 연구들은 연령을 물리, 심리, 사회적 과정의 지표의 한 분류적 변수를 사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연령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보트위닉(Botwinick, 1978)¹⁶⁾은, 이 쟁점을 가장 우아한 필체로 정리하고 있다. ‘연령이라는 개념은 시간과 동의어이다. 시간 그 자체는 삶의 기능, 행위, 혹은 다른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시간은 어떠한 것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감각현상을 일으킬 만한 물리적 차원을 지니지 않는다... 시간은 인과적인 많은 사건과 경험들의 조야한 지표일 뿐 이다.’

비슷한 비판이 코호트의 개념에도 제기된다. 로소(Rosow, 1978)가 기술하고 있듯이, ‘코호트’ 자체는 실제의 변수가 아니다,¹⁷⁾ 그것은 너무 비정형적이며(amorphous). 다른 기저의 요인들의 지표일 뿐이라고 한다. 일반 코호트 분석은 변화를 기술하고,

16) Botwinick, Jack. 1978. *Aging and Behavior*. New York: Springer.

17) Rosow, Irving. 1978. "What is a Cohort and Why?" *Human Development* 21:65~75.

서로 인과적이지 않은 요인들을 찾는다는 유용할 수 있으나, 연령, 기간, 코호트 효과에 관한 결과들은 과학적인 설명력에 있어서 항상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코호트 분석가들이 주장하듯이, 코호트 분석에서는 이론과 부수적 정보가 참된 인과요인을 찾는 데 필요부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코호트분석에 내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로저스(Rodgers, 1982)는 연령(Age), 기간(Period), 코호트(Cohort) 모형의 변수 중 적어도 하나를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⁸⁾. APC 효과를 추정하는 절차는 확실(robust)하지 않으며, 미미한 결론으로 이르기 쉽다. 연령, 코호트를 보다 재제한 의미 있는 변수로 대체하는 것은 규정의 문제를 통과할 수 있고, 연구의 개념적 적합도도 높일 수 있다. 연령이나 코호트를 대체하는 변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1) 연구하고자 하는 종속변수의 적절한 원인이 되어야 하며, 2) 생략된 변수와 상관되며, 3) 모형에 빠진 변수를 포함하는 이유를 포괄해야 한다. 로저스는 이러한 접근은 실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발견적으로 제시한다.

연령, 기간, 코호트 모형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규정하고 부수적 정보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연령분석의 개념적 방법론적 쟁점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논의들이 혹은 연령, 혹은 세대, 혹은 코호트의 명칭으로 연령계층현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동일한 차원이 기술적으로 연령에서 코호트, 혹은 기간으로 전환되었을 뿐인데 이에 상이한 이론적 의의를 부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우려된다.

연령계층은 연령관계와 사회생활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분석틀이다(Riley, Foner, and Waring, 1988¹⁹⁾). 연령 차이는 상이하더라도 서로 밀접히 관련된 두 시간의 효

18) Rodgers, Willard L. 1982a. "Estimable Functions of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74~787.

Rodgers, Willard L. 1982b. "Reply to Comment by Smith, Mason, and Fienber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793~796.

19) Riley, Matilda, Anne Foner, and Joan Waring. 1988. "Sociology of Age." in Neil

과와 그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하나는 세대 혹은 코호트의 영향으로 설명되는 연령 차이이다. 코호트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거나 생애 경험을 공유한 집단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코호트의 집단경험이 기초하는 사회변동의 힘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코호트 자체가 실제적인 개념으로 전제하고 코호트의 차이를 주요한 실재론의 경험적 근거로 제시하기 보다는,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코호트에 기초한 세대개념 또한 그 자체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보다 연구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험의 공유와 집단적 정체성을 지니는 세대를 규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어쨌든, 박재홍교수가 분명하고도 적절하게 지적하였듯이(2001) 경제적 조건이나 정치적 격변에 대한 경험의 공유 자체가 당연하게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거나 집단행위와 의식을 결과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어떠한 사회, 문화적 맥락, 권력동원 과정에서 코호트가 실제적 의미를 지니는가는 경험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주제일 것이다.

연령차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시간의 축이 생애(life course)이다. 코호트 효과가 집단 경험에 따른 장기적 시간효과라고 한다면 생애에 따른 차이는 개인수준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요한 생애효과로 지적할 수 있는 시간의 속성은 시간, 순서, 배열, 경로의존성 등이다(은기수, 1999)²⁰⁾. 현재 어느 정도의 기회와 자원을 획득하고 있는가는 이전 생애에 크게 의존한다. 행운과 불행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인생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확률적으로 매우 작다. 보통의 우리의 삶은 역할들의 연쇄과정의 관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들의 다양한 생애과정에서도 어떤 지속성이나 선후관계, 혹은 경로의존성과 중요한 유형적 특성을 발견하게 된다.

생애의 경로의존성과 제도화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연령 규범을 지적할 필요가

Smelser ed. *Handbook of Sociology*. Newbury Park, CA: SAGE.

20) 은기수. 1999. "생애 과정이 결혼 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6~70.

있다. 생애과정의 이질성이 제한되고 생애과정이 경로의존성을 지닌다는 것은 생애과정의 강한 연령규범성을 내포한다. 연령규범은 특정한 연령에서 기대되는 역할규범이다. 결혼시기, 첫 입직시기, 출산양육기, 은퇴기와 같이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시간적 구성은 개인의 이해나 필요 조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 결정은 사회적으로 기대된 제도나 규범에 구속되기도 한다. 연령규범의 강제력은 노동, 가족역할, 일상생활에 대한 제도적 구속이 강함을 반영한다.

기회, 자원, 태도의 계층화는 또한 생애과정을 통해 변할 수 있다. 계층화의 생애변화를 다네퍼(Dannefer, 1991)는 지속형(constancy), 분리형(divergency), U-자형(U-shaped), 촉발형(trigger event), 수렴형(convergence)으로 구분하였다.²¹⁾ 지속형이란 생애과정의 초기에서 경험한 불리와 혜택의 차이가 이후 생애과정에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시간의 효과는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분리형과 수렴형에서는 시간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 부가효과가 확인된다. 전자의 경우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심화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초기 불평등이 시간에 따라 완화되어 나타난다. 촉발형은 사회불평등이 일정기간 항상적으로 유지되지만, 이후 특정한 제도나 사건에 의하여 심화되는 경향을 가리킨다. 이렇게 계층화가 생애를 통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연령차이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그리고 세대와 생애의 시간의 축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코호트의 경험, 생애의 효과가 연령집단간 특정한 기회의 분배를 결과하고, 이러한 기회의 차이가 또한 연령집단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상이한 시간경험을 전제로하는 이들 차원들의 효과를 구분하고, 이러한 차원들 속에 착지된 그리고 시간효과를 결과한 실질적인 요인(계급, 경제, 정치, 문화 변동 등)들의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 연령효과, 코호트, 세대 등의 개념이 연령집단간 갈등이나 연령계층 현상은

21) Dannefer, D. 1991. "The Race is to the Swift: Images of Collective Aging." In G. M. Kenyon, J. E. Birren, & J. J. Schroots(eds.), *Metaphors of Aging in Science and the Humanities*. New York: Springer. pp.155~172.

연령 자체 보다는 그 안에 함축된 다른 실질적인 요인들의 지표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령계층은 생애, 코호트의 시간과 그 연쇄/발전과정을 통해 지속, 변화된 다른 사회계층화 요인들의 결합양상을 반영한다. 연령계층을 실재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기보다 그 구조화과정과 그 기저의 요인들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 타당하다.

그런데 연령계층현상에 관련하여, 연령자체가 하나의 불평등의 인과기제로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연령이 그 자체 실제적인 차별기제로서 작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령차별주의 현상에 주목할 수 있다. 맥멀린과 마샬은(McMullin & Marshall, 2001) 연령차별주의를 연령차별구조와 이데올로기로 구분하고 있다.²²⁾ 연령차별 구조란 특정 연령집단의 사회적 기회, 자원을 박탈하는 구조, 제도, 그리고 이에 기초한 행위를 의미한다. 연령차별의 두 번째 차원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로서 연령차별주의는 연령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신념, 가치, 태도를 의미한다. 흔히 제도나 구조수준에서 실행되는 연령차별 행위는 연령차별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당화된다. 결국 연령차별주의(ageism)는 구조화된 관계(structured relation)로서, 특정 연령층에 대한 구조적이며 이데올로기적 배척현상으로서 정의할 수 있다.

제 3 절 한국에서의 세대논의: 현 노년층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정치적으로는 보수주의 정권의 토대로서, 이제는 사회변동의 세력을 지니지 못하는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세대인가?

세대현상은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더욱이 급격한 사회변동이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간 자원과 가치의 차이는 사회갈등의 원천이 되기 쉽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와 같은 선진사회에서 노인이 세대갈등의 중심에 놓인 데에는 복지국가사회에서 생애의 제도화 특성과 관련된다. 복지비

22) McMullin, Julie and Victor Marshall. 2001. "Ageism, Age Relations, and Garment Industry Work in Montreal." *The Gerontologist* 41/1: 111 ~ 122.

용의 주된 지출이 노인의 연금, 의료서비스에 제공되는 상황에서, 세대이전의 형평성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부담’으로서 노인집단의 속성이 규정되는 이데올로기적 함의도 지닌다. 비록 근대화이론과 복지국가론이 노년세대의 지위를 빈곤과 부의 양극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회적 부양 부담’으로서 노년층을 귀속시키는데 두 접근은 일치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사회에서도 노년층은 사회적 부양부담으로서 세대대체 및 세대형평성 논의에 중심에 놓여 있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부담’론 이외, 압축변동의 맥락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한국적’ 세대론에 유의하고자 한다. 다른 아닌 문화, 정치 영역에서 불어지고 있는 세대론이다. 1990년대 이후 신문화현상으로서 ‘신세대론’이 제기되었다. 신세대는 빈곤의 경험에 부재하며 탈정치적 성향이 두드러진다. 최근에는 20대~30대와 50대~60대 이상의 연령층사이 뚜렷한 정치태도 차이에 관심이 주어진다. 2002년 대선결과는 어떠한 사회계층 요인(직업, 계급지위, 교육수준 등)보다 지역과 연령차이가 정치이념을 차별화하는 중심된 사회요인으로 드러났다. 연령집단별로 진보/보수, 친노무현/친이회창, 친한나라/친민주당으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 세대론이다.

한말부터 일제시기 해방, 한국전쟁, 1960년대 4·19, 5·16, 1980년대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 2000년대 촛불시위와 같이 정치사적 격변 속에서 많은 동시대인은 이념갈등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띠지 못하고 특정 이념에 동화되도록 선택을 강요받았다. 수없이 반복되고 전복된 정치체험은 이념이나 신념에 있어 세대간 차이와 갈등을 조성하였다.

세대간의 이념갈등이 진보/보수, 민주주의/권위주의 축으로 대별되는 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가 민주화 방향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으로 믿고 있다. 지금의 연령분리는 민주화의 자양분을 받고 성장한 신세대와 권위주의, 억압적 정권에 종속된 기성세대의 갈등이라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며, 문화적으로 전통과 획일주의의 특성을 지닌다면, 젊은 세대는 체제비판적이며 권위주의에 맞선 사회변동의 중심 집단으로서 간주된다.

세대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세대를 유형 짓는 기준에 고심하였다. 세대 특징을 유형 짓는 수식어는 정치, 문화적 변화를 상징한다. 예컨대 전쟁세대, 냉전세대, 민주화세대 등 정치적 사건을 표상하는 수식어가 보태진다. 1990년대의 신세대 특징을 구분하기 위해 x세대 정보화 세대 개념이 만들어졌다.

흥미롭게도 여러 연구들이 지적하는 세대특성은 매우 일관된다. 젊은세대는 개인지향, 소비지향, 탈권위지향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박재홍, 1992).²³⁾ 집단생활보다는 개인생활을 추구한다. 예절이 부족이며(노인공경하지 않으며, 버르장머리 없다), 소비지향적이며(근검절약하지 못하며), 개인주의적이며 창의적이라 한다.

한국사회학(1990)의 표본조사결과는 40대 이상 기성세대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적이며 고집이 세지만, 근면, 검소하며 인내심이 강하고 희생적임을 보여준다. 40~50대는 전쟁과 빈곤을 경험하였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 개발의 30년의 최말단에서 최고관리자까지 경험한 산업화의 주역이다.²⁴⁾ 50대의 정치, 사회의식은 1960년대 학생운동의 맥락에서, 40대의 정치·사회적의식은 1970년대의 학생운동에서 읽어진다. 중장년층의 정치·사회적의식은 한마디로 이중성으로 표현된다. 통일지향적인 동시에 민주화에 대한 갈망도 크다. 근대화과 전통에서 정서적 혼돈을 겪고 있다. 민족과 세계라는 가치관을 다같이 추구하였다. 권력에서는 소외된 집단이라고 한다. 1970년대 이래 40~50대는 양김에 치여서 성장하지 못한 세대이며 1980년대에는 민주화세대에게 사회의 지도적 지위를 조기에 물려주어야 하는 초조감을 가진다.

60대 이상의 노인세대는 권위주의적, 보수적, 집합지향적, 정신주의적이며 여가보다 일을 중시하는 세대로 인식되고 있다. 노년세대의 대다수는 경제적 궁핍이 생활의 일부였고 농촌의 피폐 속에서 만주, 일본 등으로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도시화와 산업화를 체험하였다. 그들의 생애경험에는 대동아

23) 박재홍. 1999. “기성세대의 생애사화 세대차이 인지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 『한국사회학』 33: 257~296.

24) 이종오. 1996. “40-50대: 사회 정치의식의 모호성과 복잡성” 『역사비평』 32호 (봄):170~174.

전쟁, 일제식민통치, 6·25, 산업화 등 사회변화가 녹아있다. 박완서는 60대의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²⁵⁾을 강조한다. 일본을 조국으로 알면서 성장기를 보냈으며, 좌우, 남북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청년기를 보냈다. ‘우리처럼 시대를 잘못 만난 세대도 없을 것이다’라는 한탄과 함께 설새없이 겪은 전쟁의 공포와 궁핍을 세대만의 불공평한 불운으로 느낀다고 한다. 한편에는 이러한 한탄 속에, 현재의 부와 안정에 대한 자긍심도 공존하고 있다.

홍덕률은 주요한 정치, 사회, 경제적 경험을 한 축으로, 정치의식을 다른 한축으로 하여 세 유형의 세대를 크게 유형 짓고 있는데, 1950년대 이전에 출생하여 60~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산업화세대, 현재 50대 이상), 1953년 이후에서 1970년 이전 출생한 세대로서, 흔히 386으로 지칭되는 민주화세대, 70년 이후 태어난 정보화세대로 구분한다.²⁶⁾ 각 세대의 경험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차원에서 살펴보고, 각 세대의 사회정치의식의 특성을 비교하고 있다. 그 중 산업화세대의 세대경험과 정치, 사회, 문화의식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면, 그들이 태어난 전전 이 전시기야 말로 정치적으로 혼돈되었고, 절대적 빈곤이 보편적이었다. 그들은 1960년대, 70년대의 고도의 산업화과정에서 주도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들의 세대경험은 고유한 세계관과 가치관과 연결된다. 보편화된 절대적 빈곤상황에서 일차적인 목적은 빈곤으로부터 탈피였다고 한다. 이러한 물질주의의식은 한편으로 고도성장을 이끈 추동력이었고 또한 그 결과이기도 한 집합 심성이었다고 한다. 내일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착같이 생존을 위해 살아야 했고 냉전의 질서 하에서 철저한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를 교육받았다고 한다. 산업화세대는 군사문화, 정치적 권위주의 문화에서 착상된 보수주의의 강력한 토대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집단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유보될 수 있다고 믿으며 반공주의와 냉전주의 위에서, 국가안보와 성장제일주의를 절대시하는 입장

25) 박완서. 1996(봄). “60대: 삶과 정신의 운명적 이중성”. 『역사비평』 32호(봄): 175~181.

26) 홍덕률. 2003. “한국사회의 세대연구.” 『역사비평』 64호(가을): 150~191.

을 지닌다. 이러한 보수주의는 이승만정권이래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40 여년 동안 우리사회의 지배 이념이자 질서의 원리였다고 강조한다. 물론 산업화 세대내에도 4·19세대, 63세대와 같이 민주화운동세대도 존재하지만, ‘구체제에 포섭된 좌절된 세대’, ‘거세당한 투항세대’로 표현되듯이 극히 일부만이 민주화운동을 지도하였을 뿐, 독자적인 사회운동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 산업화세대의 사회정치적 위상은 1990년대 이래 여러 요인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보수주의 쇠퇴의 근거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1980년대 말 냉전질서의 종식, 물질적 풍요는 물질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초가 되었다. 민주화의 진전, 정보화, 경제위기 등은 지배적 세대로서의 위상을 위협한다고 한다.

1. 세대논쟁의 이론적 빈곤

세대론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변화가 세대갈등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세대간 이념이나 가치에 있어 차이가 큰 것은 생애의 특정시기, 특히 청년시기에 노출된 주된 사회변동이 각인되어, 그 영향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전제한다.

많은 연구들이 세대를 구분 짓는 주요한 사회변동 요인을 찾고, 세대특성을 규명하려 하였지만, 그러한 시도는 탐색적 수준이며 이론적 치밀함이 미숙하다. 전쟁의 경험 여부를 통해서나, 민주화 운동의 경험여부나, 소비문화에의 노출과 같은 유형화의 근거는 상식에 근거하는 편이다.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연령차이에는 개인발달이나 생애과정에 연관된 동학과 거시, 사회 변화에의 동학의 두 메카니즘이 상호 중첩되어 있다. 노동기회에 대한 연령집단별 이해 차이, 가치관이나 생활양식, 정치관에서 북어지고 있는 연령집단별 차이는 생애경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의식, 정체성의 중층적 동학과과정에서 복합적으로 구조화된다. 그런데 세대론은 시간이 함축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동학과과정과 이를 구조화하는 사회적 조건들을 ‘사회변동의 집합적 경험의 각인과정’으로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연령차이가 주로 세대현상으로 해석됨으로써 연령자체가 중심된 사회변인으로 놓여지는 위험이 크다. 생애의 효과나 성숙의

효과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과연 일자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세대이슈인가? 노동시장에서의 조기퇴직의 압력은 앞으로 더 가중화될 수 있다. 어쩌면 구세대보다 지금 민주화, 정보화세대가 더욱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연령계층화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연령이나 코호트 자체가 사회변동의 설명요인이라기 보다는, 다른 실제적인 사회 요인들의 조야한 지표일 뿐이라고 한다. 연령, 코호트 자체로서는 어떠한 설명력도 가지지 않으며, 부가적 요인과 이론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세대중심론에서는 개인적, 사회적 시간 속에 내포된 사회변동 요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상되는 위험을 앓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세대논의에서, 정작 이러한 민주화를 가능케 하였던, 사회계층, 노동계층, 사회운동, 구조의 문제가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다. 세대중심론은 민주화가 과연 특정 세대의 전유물인가, 혁명성이 노동자계층의 전유물인가와 같이 구조적으로 결정된 위치와 주체사이의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다.

세대론은 사회변동의 주된 동인으로서 세대경험, 세대연대, 세대행위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논리에서 세대내의 이질성의 차원은 간과된다. 노년세대, 젊은 세대의 양극논의에서 그 안에 다양하게 관찰되는 태도, 생애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그리고 그러한 차이를 결과한 사회계층요인이 연구의 관심에서 빠져나간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희생양식의 접근이다. 노년세대는 정치적 보수주의의 토대로서 집권세력의 꼭두각시로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집단으로 배척된다. 이러한 주장은 노년기 내부의 다양한 계층화, 민주화, 정보화 세대 이면의 다양한 이질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편의 사실을 일침봉대하여, 과장·왜곡하는 선동식 주장에 가깝다.

선동식 저널리즘은 일부의 사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현실을 왜곡한다. 실질적 문제가 되는 요인에 대한 관심을 잠재우고,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생양을 찾는다. 현재의 세대론은 연령분리를 정치적으로 동원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선거철이나, 정치적 소용돌이 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권력집단들에 의해 세대는 전략적으로 동원된다.

한국판 세대론에서는 연령차이가 연구대상에서 어느 순간 정치적 대상으로 변질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여론조사나 각종 사회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연령차이는 신문, 영상 등 정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러한 차이에 정치적 권력이해가 개입하여, 실질적 사회적 힘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론은 세대현상을 발전시키는데 한 몫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려되는 것은 방법론적 엄격성, 논리적 엄격성이 방기하면서, 학문과 정치의 경계가 허물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연구자의 지향에서, 정치적 지향에서 글쓰기의 경계가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데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상아탑에만 갇혀서, 현실을 뒤로하고, 논리나 방법에만 골몰하는 현학자나, 급하게 변화되는 사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천적 이론가의 길을 지향하거나, 학문의 공동체 내부에 다양한 관점과 입장들이 공존하는 것이 학문 발전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지만,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세대론은 이론적으로 빈곤하며 경험적 근거가 취약하며(오직 그 피상적 현실의 일부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한) 저널리즘에 편향되었다고 생각한다.

2. 세대실재론: 과연 세대 자체가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인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연령차이 혹은 세대현상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정치화되어 있다. 연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정치적, 사회변동의 실재로서 세대경험이 형성되었는가에 주어진다. 주장이 펼쳐지는 양식은 주요한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변동의 시간적 위치에서 각 세대를 특징짓는 정치적 이념, 가치와 태도를 발견하는데 주어진다. 이러한 논의전개과정을 따라가면서 독자는 세대가 너무 살아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또한 객관적 구조와 주체사이의 긴장이 결정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즉자적 세대위치에서 자의식을 지닌 세대로 귀결되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나아가 구조로부터 세대 고유의 민주성이나 보수성의 운명을 규정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치, 사회, 경제적 격변은 세대경험의 기초가 되었고, 세대는 정치, 문화 갈등을

이끄는 주체로서 부상한다. 이념적, 문화적 이념대립이 세대교체의 형식을 통해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세대를 실재하는 것으로 전제하는 순간 왜 세대갈등이 부상하였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사라진다. 한편 신세대, 인터넷 세대의 정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세대가 얼마나 상황적으로 구성되는가를 깨닫게 한다. 처음 이 세대는 탈정치적이고, 개인화된 세대로서 민주화세대(386세대)와는 차별적인 세대로서 비치었다.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고 경제적 풍요에서 소비를 추구하고,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자유롭게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누린 첫세대로 인식되었다. 그 존재기반에서 사회비판적 정치의식은 발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세대가 그러나 대통령선거에서 누구도 예상 못한 정치세력으로 변신하였다.

사회변동에 대한 중요한 설명력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 세대논의는 이론적으로 정제되어있다. 지나치게 정치적, 실천적 관심에 경도된 세대접근은 또한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치밀함을 결여케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현재 우리사회에는 어떠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 행위, 실천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정치적 지향을 늘 강제되어온 사회에서 정치화의 바람은 세대논의에도 강하게 불고 있다. 현상으로서 정치화보다는 정치화된 입장에서 세대를 재단하는 흐름에 우려가 크다.

3. 세대경험과 세대의식

만하임, 릴리, 글랜, 라이더, 박재홍 등의 국내외 학자들은 청소년기의 경험과 인상이 기층에 각인되고, 이후의 경험들이 여기에 누적됨을 강조한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청소년기의 경험이다. 이후의 경험은 이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다고 주장한다.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새로이 해석하면서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점은 25세 이전 청소년시기로 파악한다.

세대론이 이론적으로 메꾸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세대경험과 세대의식사이의 관계이다. 다양하게 번역된 세대론에서 세대경험은 단순히 외부에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내면화, 사회화과정으로 파악될 뿐이다. 세대론은 경험을 외부 요인의 사회화나 심리적 발달과정의 결과로 전제하고, 경험의 주체적인, 관계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다. 그러나 자아, 정체성, 가치관은 외부환경의 단순한 내면화 과정이 아니다. 경험자체에 대한 의미부여는 의식적이며 자기확인적 과정이다. 전통이나 경험은 의미의 원천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동원할 수 있는 저장고이다. 경험은 의식되는 때 순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구성된다.

현 노년세대는 대부분 낮은 교육수준에 있다. 이는 한편으로 정치태도의 보수성과 상관관계가 깊을 수 있다. 또한 근대교육의 혜택을 처음 누린 세대이기도 하다. 지배적인 사상, 이념에의 영향은 단순히 사회화, 내면화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전략, 자아확인의 과정으로 의미가 구성된다. 식민지 경험은 민족주의의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친일사상도 공존한다. 군대참전의 경험은 반공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착상되는 계기일 수 있다. 피난민의 전쟁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청소년기의 기층경험은 의식과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후의 경험들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경험은 현 시점에서의 사물, 타인에 대한 태도나 자기정체감 혹은 미래의 삶에 대한 설계와 무관하지 않다. 궁핍의 경험이 소비행태 및 태도, 시집살이 경험이 성차별에 대한 태도나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문제는 경험과 태도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궁핍생활 자체가 근검, 절약의 생활을 조성하지도, 또한 그런 의식을 결과하지 않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포자기할 수도 있다. 가난이 근검, 절약에 대한 가치를 키우는지, 무계획, 자포자기 성향을 키우는지는 상황적이다. 경험의 의미는 상황과 의식적인 행위자의 상호과정에서 구성된다. 세대실재론은 과연 어떤 경험이 어떻게 체화되고, 어떤 양상으로 행위, 사회변동적 함의를 가지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세대론은 노년세대를 권위주의, 보수성으로 재단한다. 또한 세대간에는 단절적인 입장이 강하다. 그러나 노년기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정체성, 의식 형성의 동학에 유의하고 있다. 주체는 끊임없이 과거, 현재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세대론은 태도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청년기의 중심된 경험이, 향후 세계관과 정치적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안정성을 위협하는 많은 사건, 상황들이 존재한다. 새로운 사고나 세계관이 안정적인 생활로부터의 탈골상황에서 흔히 이루어지기 쉬운 점에서, 은퇴, 가족, 사회적 관계의 총체적 변화는 정체성 및 그들의 정치, 사회의식에도 중요한 변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적이라면 세대의 어떠한 특성에 연유하는 것인가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대부분의 세대론은 세대대체 혹은 세대단절적 설명이 주가 된다. 마치 운명적으로 출생에서부터 세대의 성패가 결정된 것처럼 인식된다. 비록 세대현상을 강조하는 것이 모든 사회갈등의 중심을 세대로 환원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세대단절, 세대분리논의에는 그러한 세대를 존재하게끔 한 구조와 상황이 쉽게 빠져나간다. 이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으로 이르는데, 과연 한 세대의 정치, 사회적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사회조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변화였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세대연구자들은 젊은세대 중심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전제한다. 첨예한 이념대립으로 묘사되는 세대갈등, 보수주의와 민주주의 현현으로 파악되는 세대가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세대론의 중심에는 의식화된 대학생과 같이, 현 권력자원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하는 권력집단과 같이 엘리트집단이 놓여 있다. 사회변동에 대한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배회하고 있다.

세대간 이질성과 세대내 동질성이 과장된다는 비판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절대주의적 주장으로 이르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상대적 설명력은 그 주장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또한 대안의 설명에 대한 고려를 전제한다. 현재의 세대론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너무나 자유로운 것은 아닌가. 노인 세대의 보수성이 과장된 것처럼, 현 민주세력의 대변으로 간주되는 20,30대의 정치적 입장의 진단에서 우리는 좀더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민주화가 어찌 특정 세대의 (운명지위진) 힘으로 이루어지겠는가.

“20대나 30대는 모래시계 세대이기 때문에 정의감이 강할 것이라는 향간의 편견과 달리 우리 젊은 세대는 이미 대학시절부터 ‘늑대’와 ‘양’의 온갖 기질을 갖고 있

었다. 젊은 시절 한 때 나도 사회변혁에 동참해 민중에 대한 이타심을 발휘한 적이 있다는 과장 섞인 회고담이 현재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악행과 비행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1987년 6월에 답장차 한번 타본 사실을 면죄부로 삼아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신의 측근을 세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요직에 앉히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앓는 정치지도자도 있는 판국에”²⁷⁾

제 4 절 맺음말

사회변동과 개인적 변화과정은 서로 얽혀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가 존재한다. 코호트 경험과 성숙(고령화) 경험을 분리하고, 사회적 변화, 개인의 변화, 인간발달의 상호관계의 중층성을 설명하는 어려움은 크다.

현재 한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세대갈등론은 대부분 이러한 개념적, 방법론적 혼돈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심지어 기초적인 연령, 기간, 코호트 속성도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 혹은 이의 코호트적 조작을 통해서 연령이 실재적 사회계층요인으로 전환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물론 연구자의 강한 문제의식이나 직관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겠으나, 사용하는 개념의 명료함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과될 수 없다. 앞에서 기술하였듯이, 이러한 엄밀성이 결여된 가운데 정치적 태도, 투표행위, 사회정책, 경제적 운에서 세대갈등이 과장되고, 특정 연령층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동원될 위험이 크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가 세대/코호트, 연령집단간 갈등 기저의 실질적인 갈등의 구조를 은폐할 수 있다.

27) 임 민. 1996. “20대-정신도 육체도 자유로운 신세대.” 『역사비평』, 계간 32호. 봄. 155~162

제 3 장 노년기 가족관계와 일의 모순

제 1 절 문제제기

한국에서 노년기 가족과 일의 의미는 모순적이다. 한편으로 가족관계나 노동관계에서 노년기 활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가족은 노부모 부양에 여전히 중요하게 기여하며, 많은 노인이 높은 근로의식을 지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통적인 경로 의식이나 효 규범의 사회적 확산, 장유유서의 유교식 전통 문화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가족부양과 노인 자신의 높은 근로의식 그리고 효의식의 사회적 공감대는 또한 국가수준에서 저비용의 복지를 가능케 한 제도적이며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정형적 기술이 한국 노인의 가족, 경제, 사회적 특성을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정형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의문될 정도로, 개별적으로 관찰되고 경험되는 노년기 가족 및 노동 특성은 다양하다. 실제 최근의 가족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은 이러한 정형화된 관념과 상치되는 모습을 띤다. 가족구조 및 관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가족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학적 증거는 이미 오래되었다(권태환·박영진, 1995).²⁸⁾ 가족의 제도나 생활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가족관계가 복합적임을 밝히고 있다.

노년기 노동의 의미 또한 대답되지 않은 질문들이 산재하다. 다른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노년기 경제활동참가율과 노후 소득원으로서 일의 중요성은 노년기의 생활이 일과 연계가 큼을 함축한다. 그런데 노년기 노동의 특성을 보다 자세

28) 권태환·박영진, 1995. “가구구조와 가족형태” 권태환, 김태현, 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히 살펴보면, 노동시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연령에 의해 층화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노동의 유연화, 종신고용의 종언, 화이트칼라의 조기퇴직 현상이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일하는 고령자의 특성이 더욱 주변화되고 있고, 노년기 일은 기초생계보장의 절대적 필요가 아니라면 부정된다.

연령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미 체계가 지속되고 변화되는 사회구조적 맥락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일천하다.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복 많은 노인과 불우한 노인의 잣대가 일의 상태로 가늠되었다. 이른바 가장 복 많은 노인은 일하지 않고, 자녀로부터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물질적 생활 걱정 없이 즐겁게 관광 여행을 즐기는 노인이라고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우한 노인은 노점에서 물건을 팔거나, 폐휴지를 수거하는 등 노년기에도 일하고 있는 노인으로 비쳐지고 있다.

광범하게 퍼져 있는 가족부양의식과 생산성 담론은 노년기의 자원을 제약하는 연령주의를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질적 자원의 결핍은 문화적 자원의 결핍에 영향을 미치며 역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 관계라기보다는 쌍방향 관계이며 발현적 속성이 강하다.

현재의 노년 이미지는 기업, 현장, 일상생활, 가족관계에서 매우 다양하게 또한 상충되게 형성되고 있다. 학술, 정부기관, 연구기관이나 여론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도 노년기 이미지 창출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지식인에 의해 대변되는 주요한 두 접근은 경제/정책개발 관점에서의 비용/생산성 접근과 사회복지학에서의 문제중심(혹은 취약자 복지) 접근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성 혹은 복지정책 관점에서 노인은 흔히 부담스러운 부양/복지대상으로서 파악된다. 생산성/비용에 대한 고려는 국가 재정, 기관이나 사용자의 입장에서만 고려될 뿐, 노인 주체나 정체성의 문제는 흔히 간과되고 있다. 노인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그것의 사회적 맥락과의 유관성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체계화된 담론은 다양한 언론, 대중매체를 통해 중요한 이미지로 파급되어 노년기와 노인의 자아 경험에도 개입하고 있다.

정형성에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의 사회적 기원을 파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배적인 문화와 규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맥락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노년기 가족 및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쟁점과 의미체계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그러한 의미들의 재성찰을 통하여, 노년기 가족, 노동 문제가 발현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맥락을 이해하는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인구, 제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노년기 가족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러한 노년의 가족경험이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노년기 노동과 관련하여 상호 모순적인 관념들이 공존하는 양태가 노동시장의 연령차별주의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제 2 절 노년기 가족관계

가족변화에 대한 비교사회적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가족의 견고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Palmore, 1975; Brown, 1988; Bumpass, 1990).²⁹⁾ 가족해체 현상이 보편화된 서양사회에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가족구조는 경제나 다른 사회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적 뿌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직계형 확대가족과 같이 전통적 가족구조의 특징이 많이 보존되고 있으며, 가족의 부양과 재생산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Martin, 1990).³⁰⁾

29) Palmore, Erdman. 1975. "The status and integration of the Aged in Japanese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y* 30:199~208.

Brown, Theodore. 1988.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Kyoto,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3:349~360.

Bumpass, Larry. 1990. "A comparative analysis of coresidence and contact with pare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Paper* 41.????

그러나 가족은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다. 가족관계, 기능, 세대관계의 변화는 흔히 복합적이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박경숙, 2003).³¹⁾ 비록 과거와 동일한 가족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나 기능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1. 노인가구특성의 변화: 사회적 규범에서 상황적 전략으로의 변화?

세대간 고립 vs 독립성의 증가?

노년기 자녀와의 동거는 물질적 안녕 뿐 아니라, 노후의 생활만족, 심리적 안녕,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유성호, 1996; 김태현·전길량, 1995)³²⁾ 노인가구의 탈가족화,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관계의 약화, 지원의 약화를 반영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가구형태의 변화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대 관계의 단면을 반영한다. 과거에도 가구형태는 부부,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지배적인 형태였지만, 핵가족화의 추이가 더욱 강화되었다. 노부모의 생존율이 크게 제한되었던 1966년 당시 핵가족은 혈연 가구의 66.6%를 차지하였다(권태환·박영진, 1995: 267). 한편 평균 기대수명이 크게 개선된 2000년 핵가족은 혈연 가구의 82.0%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126).³³⁾ 1인가구의 비율도 크게 증가하여 1966년 일

30) Martin, Linda. 1990. "Changing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East Asia." ANNALS, AAPSS 510:102~14.

31) 박경숙. 2003. 『요령화 사회 이미 진행된 미래』. 의암출판.

32) 유성호. 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짓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김태현·전길량. 1995. "치매노인가족의 부양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6/1: 163~178.

33) 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인가구 비율은 일반가구의 4.01%이었는데 2000년에는 15.5%로 크게 증가하였다.³⁴⁾ 일인가구에 속하는 개인 비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도시거주자보다는 농촌거주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인단독거주 비율의 증가속도도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1980년에서 2000년사이 미혼자에서 일인단독거주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5~24세, 65세 이상과 같이 젊은층과 고연령층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다(김정석, 2003).³⁵⁾ 그 동안 가구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농촌간 차이에 있다. 핵가족비율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크게 완화되었다. 그리고 1세대 가구의 비율은 1975년을 기점으로 시부와 군부에서 역전되었으며 이후 시부모다 군부에서 1세대 가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이루었다.

노인의 가족관계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독거노인이나 부부단독형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이가옥 외, 1994; 권태환·박영진, 1995; 박재간·모선희·원영희, 1996).³⁶⁾ 특히 농어촌의 노인가구의 ‘탈가족화’ 혹은 ‘핵가족화’ 현상이 뚜렷하다. 1990년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혼자 혹은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도시거주 남자노인에서는 24.9%, 도시거주 여자노인 중에서는 15.1%인 반면, 농촌거주 남자노인에서는 41.7%, 농촌거주 여자노인에서는 31.4%로 나타났다.³⁷⁾ 보다 최근 센서스 분석에서도 유사한 차이가 확인된다. 2000년도 센서스에 기초할 때, 일인가구, 혹은 부부가구의 비율이 도시거주 노인 중에서는 42.5%, 농촌거주 노인 중에서는 62.6%로 집계되고 있다.³⁸⁾

증가하고 있는 세대간 독립된 거주형태는 일반적으로 세대관계의 고립화를 반영

34) 권태환 박영진, 1995. *ibid.* p.257

통계청, 2002. *ibid.* p.123.

35) 김정석, 2003. “가족 및 가구 변화.”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발표 논문.

36)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재간·모선희·원영희, 1996.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방향-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4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37) 권태환·박영진, 1995, *ibid.*

38) 김정석, 2003. *ibid.*

하는 현상으로 이해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세대간 독립거주의 증가는 노년기의 가치변화 혹은 생활능력 개선에 따른 현상이라는 주장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진되기도 하였다. 두 주장은 20세기 초반부터 진행된 미국 노인가구의 급격한 변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주요한 논쟁이었다. 미국 사회 노년기의 소득생활, 가족형태, 취업생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20세기 초반부터 노년기의 독립적인 생활 특성이 부각되었다고 강조한다(Moen & Gratton, 1999).³⁹⁾ 19세기말 많은 노부모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원의 소득이 노후 생활에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20세기 초반부터 노인 가족구조에 변화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1920년대 이후 홀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Beresford & Rivlin, 1966; Kobrin, 1976a, 1976b).⁴⁰⁾ 또한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을 그만두는 이른바 근대적 은퇴행위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⁴¹⁾ 20세기 초반의 미국 노인의 가족, 노동, 소득생활의 변화를 종합할 때, 단독거주의 증가는 세대간 독립의 증가에 따르기보다는, 노년기 자립력의 향상에 비롯한다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지닌다. 많은 미국학자들은 20세기 노년기 단독거주율의 증가를 세대관계의 해체, 독립의 증가가 아니라, 많은 노인이 그들의 사생활선호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크게 향상된 결과에 비롯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세대관계에 대한 논의도 세대관계의 해체보다는, 복합성, 이질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라

39) Moen, Jon & Brian Gratton. 1999. "Tracking the majority: household, older workers, and retirement during the Great Depression."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5B, s28~s32.

40) Beresford, John and Alice Rivlin. 1966. "Privacy, poverty, and old Age." *Demography* 3:247~258.

Kobrin, Frances. 1976a. "The fall in household size and the rise of the primary individual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3:127~138.

_____. 1976b. "The primary individual and the family: changes in living arrangements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40."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233~239.

41) Moen & Gratton, 1999. *ibid.*

고 생각한다(Bengtson, 1993; Hogan et al. 1993).⁴²⁾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인가구, 단독거주율의 급격한 증가가 세대 관계의 고립이 심화된 결과인가? 아니면 노년기의 생활능력의 개선에 따른 것인가? 앞의 미국사회의 경험과 한국의 최근 변화의 사회·문화적 원인은 차이가 클 수 있다. 이념형적으로 개인주의와 독립성이 강조되는 문화와, 개인에 앞서 가족의 소속원의 책임과 헌신이 강조되는 문화의 경계는 분명하다. 뿐 만 아니라, 노년기의 생활조건을 가늠하는 경제 및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수준에서도 차이가 크다. 우리사회에서는 노인들의 가치나 선호와는 관계없이 거주형태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모선희, 1999; Kim & Rhee, 1999).⁴³⁾ 대체로 현재의 독립된 생활에 만족하지만, 궁극에는 자녀가 후원자가 되기를 선호하는 입장이 강하다.

비록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대부분은 횡단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어, 노인가구 변화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데 제약이 크지만 가구 변화의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던지고 있다. 필자는 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게 여겨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노인과 자녀 쌍방 이해 조건에 따라 상황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강

42) Bengtson, Vern. 1993. 'Is the Contract Across Generations Changing? Effect of Population Aging on Obligations and Expectations Across Age Groups.' in Vern Bengtson and Andrew Achenbaum, ed. *The Changing Contracts across Generations*.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Hogan, Dennis, David Eggebeen, and Clifford Clogg. 1993.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428~1458.

43) 모선희. 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개발. pp.81~119.

Kim, C. S. ka-Oak Rhee. 1999.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 Views of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2: 94~112.

Kim, C.S. ka-Oak Rhee. 2000.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 36~48.

하다고 조심스럽게 가정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동거경향은 노인의 혼인상태,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거주지, 자녀와 노인의 노후 부양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⁴⁴⁾ 그런데 노부모와 자녀세대의 입장이 동일하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일본, 한국에서 부모-자녀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 사회 모두에서 노인특성보다 자녀의 특성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Park, 1998; Park, Kim, & Kojima, 1999).⁴⁵⁾ 또한 지난 이십년간 이루어진 노인가구변화는 노인인구의 특성변화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⁴⁶⁾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주지 이동, 거주지에서 관찰되는 노인인구 구성상의 변화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던 노인가구의 핵가족화 혹은 탈가족화 경향을 다소나마 상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거주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특성으로서 자녀의 형제순위(특히 장남여부),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대체로 자녀와의 동거는 장남이며, 나이가 많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것처럼, 전통적인 가족부양 책임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자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44) 유성호, 1996. *ibid.*
 이가옥 외, 1994. *ibid.*
 모선희, 1999. *ibid.*

45) Park, K.S., Ikki Kim, Hiroshi Kojima. 1999.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Nearness in Korea and Japan: Unbalanced Aspects of Family Change in Korea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8: 93~115.

Park, Keong-Suk. 1998. *Geographic Proximity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nvergence of Individualism and Familism?*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rown University.

46) 박경숙, 2003. *ibid.*

47) 한경혜·윤순덕, 2000. "떠난 장남, 남은 장남." 『한국사회학』 34집 가을호. pp.649~670.;

Kim and Rhee, 1999. *ibid.*

Park, 1999. *ibid.*

2. 세대관계; 도구적 관계의 유지, 정서적 연대의 약화

현 가족·친족관계와 시장에서의 교환관계 그리고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이념형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일차적 관계와 이차적 관계, 호혜·단기적 관계와 비호혜·장기적 관계, 일면적/전면적 관계로 대비되었다. 사회변동과 행위변화를 연결하려는 오랜 사회학 이론은 사회변동의 전통/근대의 이분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도 가족/친족, 비공식관계가 약화되고 시장중심의 일면적, 교환관계의 성격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Greene, 1983; Logan and Spitze, 1994).⁴⁸⁾ 그러나 교통, 정보기술의 확대와 더불어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존속하며, 공식적 조직 내에서 비공식 관계가 유지되며, 시장위치나 자원획득에 비공식 연결망이 중요하게 기능한다는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며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대체 주장은 심각하게 재평가되었다(Wellman, 1979; Litwak, 1985; Granovetter, 1973; 이재열, 1998).⁴⁹⁾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시장, 이웃관계 사이의 중첩과 구분의 지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족주의가 강조되고, 연고주의가 팽배하며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미분화된 사회에서 교환/비교환, 일차/이차적 관계의 성격을 구분 짓는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과 사회영역에서 교환/비교환적 관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가

48) Greene, V.L. 1983. "Substitution between Formally and Informally Provided Care for the Impaired Elderly in the Community." *Medical Care* 21(6): 609~619.

Logan, T.R. and G. Spitze. 1994. "Informal Support and the Use of Formal Services by Older Americans." *the Journal of Gerontology*. 49.

49) Wellman, Barry. 1979. "The Community Questions: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5): 1201~1230.

Litwak, Eugene. 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amily Systems*, New York: Guilford Press.

Granovetter, Mark.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1360~1371.

이재열, 1998. "사회적 연결망으로서의 기업," 김동순외, <한국기업의 이해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족/친족관계에도 교환/비교환의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각 차원의 이념형적 순수성을 추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대간 지원관계에는 한편으로 교환관계의 차원이 존재한다. 교환론은 어떤 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그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가치가 얼마나 호혜적인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가장 안정적인 관계는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가치가 쌍방간에 호혜적인 경우라고 주장한다(Dowd, 1975).⁵⁰⁾ 이러한 주장에서 세대간 연대는 쌍방간에 교환자원을 많이 가질수록 세대간 연대는 공고해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저소득층가족보다 중상층가족에서 세대관계가 돈독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관계의 호혜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그 관계는 해체되거나, 권력, 소외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미국 노인 연구에 따르면, 가족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이라도 그 지원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부담이 커서, 스스로 관계를 끊고 고립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교환론의 관점에서 다루는 노년기의 소외 현상을 노년기의 교환 자원을 제약하는 사회제도적 환경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세대관계에는 비교환의 특성도 배태되어 있다. 관계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며 규범적인 과정을 포함한다. 동일한 지원의 교환에서도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가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대관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해체되는 계약관계와는 달리 생애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관계이다(Rossi and Rossi 1990).⁵¹⁾ 자원의 교환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은혜받음에 대한 책임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상호 지원관계가 유지되기도 한다. 또한 장기적 생애주기를 거쳐,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지배적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⁵²⁾ 심

50) Dowd, James. 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584~594.

51) Rossi, Alice and Peter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hip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52) Rossi and Rossi. 1990. *ibid.*

지어, 자원이 약화되는 노년기에도 많은 노인이 자녀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ggebeen et als, 1990).⁵³⁾

세대관계는 시간적으로 확대될 뿐 아니라, 그 지원의 내용도 포괄적이다. 교환되는 가치가 동일한 형태를 띠지는 않으며, 화폐, 시간, 노동력과 같이 금전적, 도구적 지원에 대하여 신뢰, 존경, 사랑, 인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가 흔히 교환된다.

또한 세대간 지원의 범위와 한계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다.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는 세대관계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받는 관계에 대하여 관용도가 낮을 수 있다. 반면, 생애를 통하여 개인보다는 가족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가족주의는 가족성원들의 안녕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부양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⁵⁴⁾

우리사회에는 자녀와 부모사이의 지원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규범으로서 효이념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효란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고 받드는 것, 정신적으로 편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성규탁, 1989⁵⁵⁾). 효이념은 현재에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개념은 과거와 비교해볼 때, 그리고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는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하여 자녀보다 노인 스스로의 해결을 강조하는 성향이 강하며, 나이가 많은 세대는 자녀의 부양책임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사실 노인집단 내에서도 효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다. 오늘날 많은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무조건적인 봉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의 다수가 효의 덕목으로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재의 노인

Aquilino, W.S. 1990. 'The Likelihood of Parent-Adult Child Coresidence: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05~419.

53) Eggebeen, David and Dennis Hogan. 1990. 'Giving between Generations in American Families.' *Human Nature* 1: 211~232.

54) Park, 1998. *ibid.*

55) 성규탁. 1989. "현대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9: 28~43.

은 자녀로부터의 부양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경제·신체적 자립력이 부재한 처지에서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또 자녀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이러한 부양에 대한 심적 부담을 크게 가지고 있다.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통적 규범에 현 노인 세대는 대부분 취약 계층이라는 관념이 더해져, 노년기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일방적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관계가 지배적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요컨대 가족의존적 노년기가 현 세대관계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이라고 생각된다.

세대간 지원관계를 과거와 비교한 경험적 연구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지원관계의 특징과 변화양상을 계량화하는 작업은 거주지 변화에 비해 훨씬 어려움이 크다. 세대를 통하여 교환될 수 있는 지원은 물질적 지원에서 신뢰, 애정, 책임감, 인정과 같은 비물질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세대관계는 장기적으로 그 결집도와 지원정도가 지속되거나 변화되므로 단기간의 시점에 초점을 두어 지원관계를 논의하는데 제약이 크다.

계량화된 세대관계 연구의 제한점을 전제하면서, 현 노년기 부모 세대의 자녀와의 지원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 관계의 다양성이 뚜렷하다.⁵⁶⁾ 세대간 지원관계는 더 이상 동거에 크게 구속을 받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의 경우 별거 상황에서도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도구적 지원에서는 또한 호혜성이 유지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듯이 젊은 부인이 선호하는 보육 지원자는 친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부분 노인의 의존적 관계를 편파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의 세대관계 연구가 강조된다. 세대간 고립의 양상도 다양하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를 유지하고 부부중심의 노후생활을 즐기는 노인과 빈곤의 대물림에서 자녀의 무심함을 받아들이며 자녀와 거의 연락 없이 생활하는 노인의 모습이 동시에 관찰된다.

56) 박경숙, 2003. *ibid.*

최근 세대관계 연구에서 흔하게 지적되고 있는 쟁점의 하나로 정서적 연대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다(차홍봉 외, 2000).⁵⁷⁾ 이러한 긴장은 노년기 지원 관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노부모를 신체적으로 개호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제약, 신체적 탈진 못지않게, 정서적 고갈 상태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희 외, 1998).⁵⁸⁾ 부양에 대한 책임감과 동시에 부담감은 현재 지원 관계에 있지 않는 자녀 세대에서도 표현되는데, 이들은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부모의 뜻을 강조하거나, 장남이 아니거나 직장이유와 같은 상황을 설명한다. 필자는 이러한 정서적 연대의 약화 현상은 도구주의적 가족관계가 지연된 결과와 밀접히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 역할이 부과되면 역할의 해체, 손실, 결렬의 긴장도 크게 된다. 요컨대 세대관계에 정서적 부담이 큰 도구적 지원관계 안에서 세대간의 유대나 연대가 약해질 수 있는 계기가 큼을 반영한다.

3. 효의 제도화, 핵가족이념과 확대가족 이념의 접변

부양에 대한 부담의식이 크다는 것은 세대관계에서 정서적 연대가 크게 훼손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한편으로 이러한 사회심리는 핵가족이 전제하는 세대독립성의 한 현상으로 간주된다. 산업사회에서 확대가족 중심의 세대간 지원관계는 약화되는 대신 부부 혹은 미혼자녀 중심의 가족응집성은 강화되었다는 것이 근대가족론의 일반가정이다(Parsons and Bales, 1956, Shorter, 1975; Zaretsky, 1973).⁵⁹⁾

57) 차홍봉 · 최성재 · 이가옥 · 윤현숙 · 서혜경 · 박경숙. 2000. 『토령화사회의 장기요양보호』, 한림과학원총서. 소화출판.

58) 정경희 외. 1998.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9) Parsons, T. & Bales, R. 1956.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Illinois: The Free Press.

Shorter, Edward. 1975.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ew York: Basic Books.

Wellman, Barry. 1979. "The Community Questions: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5): 1201-1230.

Zaretsky, Eli. 1973. *Capitalism, the Family, and Personal Life*, New York: Harper &

그러나 발전국가 중심의 압축변동을 경험한 사회의 경우, 부부중심의 핵가족 자 체에서도 정서적 응집성은 상당히 약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근대화과정에서 노동, 성 관계가 억압적으로 재편된 한국이나 전후 고도성장과정에서 기업사회 와 가족사이의 동반자적 관계가 강조된 일본 사회의 공통점은 가족의 물질주의적, 도구주의적 가치가 기형적으로 발달된 반면 정서적 관계는 큰 긴장을 안고 있다는 데 있다(장경섭, 1998; 木本喜美子, 1995; 山根眞理, 1998).⁶⁰⁾ 이런 맥락에서 세대 간 물질적 지원관계가 유지되지만 정서적 연대는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은 부부중 심, 핵가족 중심의 가족관계에 의한 직계, 확대가족 관계의 잠식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어느 생애 시점에서든 물질적 가족관계가 기형적으로 발달된, 서로 어울리 지 않는 핵가족/확대가족 이념의 강제된 공존 맥락에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된다. 양현아는 가족법에서 핵가족이념과 확대가족이념이 탈골적으로 결합되 어 정상적 가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양현아, 1995).⁶¹⁾ 생애 어느 시점에 서도 가족에 기초한 경제적 지원, 간호, 부양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핵가 족과 직계가족의 지원역할로서 생애가 제도화되었다. 그런데, 두 가족이념이 공존 하기에는 그 관계의 규범, 가치의 괴리가 심각하지 않은가. 근대가족관계가 확대된 친족체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상징한다는 주장은 핵가족과 확대가족 이념의 상 충을 함축한다. 그런데 이렇게 상충된 가족이념이 공존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족이

Colophon.

- 60) 장경섭. 1992. “핵가족 이데올로기와 복지국가: 가족부양의 정치경제학.” 『형제와 사회』 vol. 15.
 _____. 1994. “한국 가족의 이념과 실제: 가족규범의 다중성과 내부 모순.” 『철학과 현실』 22: 51~67.
 _____. 1998. “여성, 시장, 공공가족으로서의 국가; 재생산의 사회화와 성질서,” 『사회비평』 18: 298~327.
 木本喜美子(1995), 『家族・ジェンダー・企業社會』, ミネルヴァ書房
 山根眞理(1998), “家族社會學におけるジェンダー研究の展開,” 『家族社會學研究』 10: 5~29.
- 61) 양현아. 1995. “한국 가족법에서 읽은 세 가지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논문집』 46집.

념의 제도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 국가는 핵가족이념의 정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통해 소자녀 가치관 확산과 근대적 출산 행위를 정착시켰으며, 가족법 개정을 통해 부부중심의 가족관계를 공고화하였다. 또한 생애를 통해 확장된 세대간 지원은 확대가족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이라는 이념이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강제되었다.

이렇게 생애를 거쳐 세대간 지원과 가족응집성이 강조되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세대연대의 정서적 기초는 더 약화된 것은 아닌가 사료된다. 결국 현재의 가족, 세대 문제는 가족 가치관의 약화보다는 생애를 통해 가족수준의 세대간 응집성이 강제된 사회맥락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이 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세대관계의 긴장은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존속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개인과 가족생활에의 개입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가족의 응집성은 국가의 물리적/제도적인 개입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효의 제도화는 그 한 예에 속한다. 오늘날 효 이념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이자 보편화된 규범보다는 제도화된 법적 규제를 통하여 강제되는 성향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족관계나 생활보장 기회를 규정하는 주요한 가족법, 소득공제, 상속, 생활보장, 사회보험 등에서 가족부양의무는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가족중심 복지이념은 노인복지 정책의 일관된 방향이었다. 노인정책이 법적 기초를 세우고 제도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별로 오래되지 않았다. 1981년 법제화된 노인복지법은 애초의 건의 안 중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만 반영되었다(현외성, 1988).⁶²⁾ 노인복지법의 총칙은 전통적 가족제도의 장점과 서구적 사회보장제도의 조화, 노인복지의 책임 면에서 국가, 사회, 그리고 노인자신의 3자 공동책임, 노인 일거리, 여가선용, 건강, 경노우대제, 복지시설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좋은 수사로 가득 채워 있지만, 정작 실천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연금과

62) 현외성. 1988. “한일노인복지법의 형성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7: 5~23.

같은 사회보장의 논의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 최근 사회보험이 확립되었고 노인 정책도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중심성과 재정중립의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의 법적 제도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효 이념을 한국의 미풍양속이자 덕목으로 강조하는 이념적 교화의 노력도 게으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효는 중요한 상품 가치로 쉽게 전환되어 관광, 소비재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다.

효 이념의 제도화는 한국의 전통이자 미풍양속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어떤 가치나 특성의 기원과 관련하여 그 사회 내부 고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체제의 지배원리를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흔히 이루어진다. 은기수는 부모에 대한 공경 의식은 유가적 이념에 국한된 가치가 아니라, 유대교, 기독교, 불교등 세계 종교에 보편적으로 강조되는 가치임을 강조하고 있다(Eun, 2001).⁶³⁾

어쨌든 효 이념의 강제적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 의식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⁶⁴⁾ 또한 사회적 효와 경로의식이 아직 보편적 공감대를 얻고 있고 제도적 강제력도 크지만, 실생활에서 효의 실천이 어려운 가족이 상당수 존재한다. 개별가족의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지를 넘어서는 효의 제도화의 결과 많은 노인이 복지정책의 사각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가족의 보편성과 효의 고유성 강조가 노년의 사회적 지위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선입관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효이념은 가족의 어른으로서 노인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효 이념이 강제한 가족중심의 복지기능은 노인에게 가족 이외에는 어떤 자원도 가질 수 없게끔 하는 사회적 무책임, 불개입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가족에 위임된 부양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복지에 대한 권리의식을 제약한다. 그 결과 노인의 문제를 가족의 문

63) Eun, K.S. 2001(May). "Changing Roles of the Family and State for Care of the Elderly: A Perspective of a Confucian Country."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amilies, Aging, and Social Support. Univ. of Haifa, Israel.

64) 통계청, 1999. *ibid.*

제로 축소하고, 개별화, 익명화, 주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 3 절 노년기 일과 은퇴

1. 노년기=은퇴기?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비경제활동시기, 은퇴의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은퇴는 노년기의 보편적인 연령규범이다. 노년기에는 일하지 않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간주된다. 사람마다 노년의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일관되게 특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하게 되었을까? 인류학적 텍스트에서는 은퇴의 긴장이 잘 묘사되고 있다. 한편으로 은퇴과정과 관련된 통과의례에는 장수를 축복하고, 고된 일로부터 해방과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진다. 또한 은퇴자의 기원의례의 상징에는 그 동안 생활주역, 권력자, 가장에서 물러나는 권력이양의 긴장이 함축되어 있다. 가히 충격적이고 물리적이었을 권력이양의 긴장은 도덕 윤리로 완충되기도 한다. 효와 같은 가족부양의 규범도 가족과 세대관계 안에 작용하고 있는 권력 갈등을 통제하는 이데올로기 기능을 수행하였을 수 있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더욱 비참한 운명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발견된다. 병들 때까지 품삯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기되고 버려지는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만 용인된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는 더욱 조직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강제되었다. 상품가치로 생산성이 계량화되면서, 노동이 부여하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는 사상되었으며 상품화된 생산성의 기준에 의해 고령노동은 폄하되었다. 상품화된 노동은 노동을 팔 수 있는 권리도 제약하였다. 은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제도에 의해 강제되었다. 노년기는 비경제활동시기, 은퇴기로 제도화되었다(Mutchler et als. 1997).⁶⁵⁾

65) Mutchler, Jan, Jeffrey Burr, Amy Pienta, and Micahel Massagli. 1997. "Pathways to labor force exit: work transitions and work instabili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정년제의 억압성은 노동자의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노동자의 조직화와 정치경제적 변화와 함께 강제적인 정년제는 여러 사회에서 폐지되거나 그 강제성이 완화되었다. 그렇지만 고령노동을 제약하는 기본 원리가 변화된 것은 아니다. 고령노동의 통제는 억압적이며 강제적인 제도에서 사회연금제도와 같은 덜 강제적이고 유인적인 제도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이 여러 선진사회에서 법정 정년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은퇴하는 경향이 보편화된 배경이다.

현대사회 은퇴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그리고 개인·가족환경에 따라 은퇴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년으로 정한 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조기정년화 현상이 주목된다(Campbell and Henretta, 1980).⁶⁶⁾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은퇴의 조기화 및 은퇴과정의 다양화를 노동 및 여가행위에 대한 개인의 선택 범위가 증가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노동기회의 불평등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생애과정을 통해 누적된 기회의 불균등, 노동시장의 분절화, 지역의 산업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은퇴과정을 중요하게 결정한다고 강조하고 있다(Flippen & Tienda, 2000; Han & Moen, 1999).⁶⁷⁾ 노동시장내 소수자적 지위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은 생애를 통해 비취업 위기가 크며, 은퇴와 실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논의하고 있다(Gibson, 1987; O'Rand, 1996).⁶⁸⁾

Sciences, 52B, S4~s12.

66) Campbell, R. & Henretta, I. 1980. "Status claims and status attainment;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well-be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 618~629.

67) Flippen, Chenoa & Marta Tienda. 2000. "Pathways to retirement: pattern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labor market exit among the pre-retirement population by race, Hispanic origin, and sex."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5B. S14~S27.
Han, Shin-Kap, and Phyllis Moen (1999). "Clocking out: temporal patterning of retire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191~236.

68) Gibson, R. C. 1987. "Reconceptualizing retirement for black Americans." *The Gerontologist*, 27. 691~698.

O'Rand, A. 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understanding cumulative advan-

자본주의 경제체제안에서도 고령노동권을 보장하는 정도는 사회마다 차이가 크다(Esping-Aenderson, 1990).⁶⁹⁾ 완전고용의 이념을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는 고령노동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 탈상품화의 원리가 강조되면서 연금혜택의 관용도와 보편성이 큰 특성을 지닌다. 자유주의/시장주의 복지국가에서는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 고령 노동의 기회가 결정된다. 강제적인 정년 제도는 없으며, 생산성 기준에 의해 고령노동이 노동시장에 다양하게 배치된다. 그 결과 은퇴과정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고용안정과 소득보장과 함께 안정적인 은퇴과정을 밟는 집단과 생애를 통하여 고용불안과 빈곤위협 속에서 은퇴를 맞는 집단이 공존한다. 연금혜택의 계층차이도 매우 크다. 보수주의 복지국가에서는 대체로 일차노동시장과 이차노동시장의 경계가 뚜렷하며, 핵심노동자는 각종 제도적 보호를 받는 대신, 주변노동자는 경쟁의 원리에 방치된다. 대체로 노동과 가족역할의 전통적 성역할 분리가 뚜렷하다. 고령노동에 대한 통제도 강하다. 일차노동시장에서 핵심노동자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을 조정하고, 연공급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년에 따른 노동통제의 필요성이 크다.

근대 노동조직에서의 전형적 은퇴과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경력 이후 노후 소득보장과 함께 노동시장을 완전하게 이탈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인식된다. 그러나 현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전형적 은퇴과정을 밟는 노동자가 과연 노동자 일반을 대표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전형적 은퇴경로와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고령자가 그 수에 있어서는 더 전형적이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령 노동자의 대다수는 제도적 정년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임금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도시부문에서 소규모의 행상, 판매,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비

tage and cumulative disadvantage over the life course.” *The Gerontologist*, 36: 230~246.

69)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cy.

임금부문에서는 일률적인 정년규정을 받지 않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소득수준, 건강 상태, 가족 조건에 따라 은퇴시기가 결정되기 쉽다. 또한 일단 비취업 상태에 있다 가도 다시 취업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 결국 비임금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노동자의 은퇴 시기와 은퇴의 경계는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크다고 사료된다.

은퇴는 생활 관계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노동중심의 일과에서 시간은 제도화된 측면이 강하다. 생산과 재생산의 시간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노동시간을 통해 직장, 동료들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노동이 주는 혜택은 지위, 부, 명예, 가족의 안위, 자녀 양육 등이다. 은퇴는 상품력으로서의 노동의 종언을 상징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퇴의 충격은 흔히 상층 지위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노동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생활의 주공간이 크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노년기는 성역할관계가 새롭게 구성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남녀의 생활공간이 가정과 사회로 분리되었던 이전 생애와 달리 남성노인의 사회적 은퇴의 결과 노년기 생활공간의 젠더경계는 더 이상 분명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년기는 성역할 태도와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의 시공간이 된다. 일 중심(work oriented) 정체성이 얼마나 강한지, 일로부터의 해방 이후 많은 남성노인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가족역할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크다. 은퇴 이후 가족 역할로 축소된 관계에서 많은 남성노인이 갈등과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은 상품화된 노동중심사회, 성별로 분리된 가족/사회적 관계에서 체화된 노동지향적 태도에 비롯한다.

이에 반해 생애를 거쳐 관계지향적(relation oriented) 태도를 체화한 여성노인은 관계 형성에 이점을 지닌다.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도 자주하며, 종교활동도 많이 한다. 노년기의 성역할은 다양하게 재구성되고 있다. 한편으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사일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짐에 따라 가족역할의 성역할구분이 줄어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주된 시간 보내는 장소, 취미생활, 사회적 관계 맺기에서 성격계가 확인되는 측면도 있다.

2. 노년기 일의 의미

노년기=은퇴기의 통념과는 달리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일하는가 하면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도 한다. 일과 여가가 분명하게 대비되는가 하면, 규칙적인 일과로서 여가와 일이 구분되지 않기도 한다(김수영 외, 2002).⁷⁰⁾

많은 노인에게 일은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현 노년 세대의 경제적 빈곤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기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석재은·김태완, 2000).⁷¹⁾ 사회보호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서 노인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되어 왔다.⁷²⁾ 또한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의 중요성은 또한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되어 왔다. 일본에서 실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비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주소득원인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일인 비율이 증가해 왔다(日本 内閣府, 2002).⁷³⁾ 노년기 소득원으로 개인자산이나 공적이전의 정도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지원의 감소는 근로소득의 필요성을 크게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의 가치는 저소득층 노인에서 특히 강하다. 이들 노인이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일은 생계보조 이외의 가치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일이 매우 주변적인 것도 특징적이다. 오히려 가능하다면 피하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서 일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다.

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는 노인 대부분의 특성은 생애를 통해 노동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70) 김수영·박경숙·정규석·초의수. 2002.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실태 및 욕구조사』.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71)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2) 박경숙, 2003. *ibid.*

73) 日本 内閣府. 2002. 『高齢者の生活と意識』. ぎょうせい.

적으로 쇠약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으며, 나이가 많아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주변적인 일 밖에 할 수 없었던 과거와 현실에서 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짙다.

경제적 가치에 비해 크게 축소되어 있지만,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거나,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 노인도 존재한다. 남성노인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강한 욕구는 일의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일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에 만족한다. 일에 대해 만족도가 큰 만큼 은퇴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은퇴하면 할 일이 없고, 초라하고, 건강을 버린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여느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을 일하지 않는 이유로 흔히 지적한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데는,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경험적 인식이 전제된다. 강압적으로 은퇴를 경험한 경우도 흔히 지적된다. 고령자 적합직종과 같이, 현재 고령층에게 그나마 기회가 열려 있는 업종은 일반 노동자가 기피하는 주변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 주변화된 일자리를 기피하고 적절한 일자리기회의 제약을 인지하는 고령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다소 건강하고 건장한 노인들이 일자리의 부족을 지적하고, 쇠약한 노인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노동을 탈피하고 싶지만 생계를 위해 일거리를 찾는 현상은 노년이 여전히 일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노년기는 은퇴기로서, 제3의 인생기로 묘사된다. 노동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도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노인의 생활이 노동과 불완전한 동반관계에 있다. 죽음 아니면 심각한 장애에 이르러서 비로소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노년기에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노동의 굴레는 생산의 의미가 교환가치로 축소되고 많은 의미 있는 활동이 비생산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왜곡된 사회관계의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면, 상품노동의 노년기에의 확장은 노년기 정체성 긴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다.

3.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이중적 대응

좀 더 거시적인 제도수준에서도 노년노동의 의미는 서로 상충된 두 관점사이에서 배회하고 있다. 한 입장은 ‘친고령자고용접근’ 혹은 ‘고령자고용촉진 접근’으로 일컫는다. 전세계적인 고령화에 즈음하여 복지국가인 선진사회에서는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이 우려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보장의 재정 문제는 중차대한 과제로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OECD, UN, ILO 등 주요 세계 기구들은 일련의 사회보험 개혁을 권장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비용을 긴축하고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데 주어진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의 민영화, 보험의 다층 체계로(기본, 비레, 기업/개인 보험의 조합)의 변화가 강구되고 있다. 이러한 개혁 변화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노동시장이다. 상식적으로 연금의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급 연령이 인상되고, 인상된 기간 동안 노동을 통한 연금 납부 기여를 증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다. 이에 고령층의 전반적인 지적, 건강 수준의 개선도 노동력 참여를 권장하는 변화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21세기 고령 사회의 비전으로 ‘활동적 노년기(active aging)’ ‘70대 현역 사회(working society in the 70s)’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 데에는 우리사회가 사상 초유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하였다. 2002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7.9%, 2020년이면 14%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체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동력의 고령화도 예상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상대적 증가와 생산인구의 상대적 감소, 그리고 생산인구 자체의 고령화가 국민경제나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최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고령자의 노동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여러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법(1991)이 제정되었으며, 고령자 우선고용을 권장하는 고령자 적합(최근 ‘우선’의 용어로 변경)직종이 70여 종 개발되었다. 고용보험에서는 또한 고령노동자의 재고용, 다수고용, 신규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정년연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들의 한계성이 이미 노정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 정책의 대부분이 법적 강제력이나 정책적 실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에 대한 강조는 권고 수준의 조항에 지나지 않는다. 고령노동자의 다수고용, 신규고용, 재고용에 대한 임금보조는 이들 지원이 없어도 여전히 값싼 고령노동을 선호할 업종들에 제공되고 있다. 고령자적합직종의 대부분은 주변적인 일거리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의 미온성은 고령노동촉진접근이 결코 현 노동정책의 중심된 입장이 아님을 증명한다.

다양하게 전개되는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이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데에는 뿌리 깊은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의 영향이 크다. 노동시장의 연령차별구조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다양하다. 직종에서의 연령분리 현상은 최근으로 올수록 고령자가 주변적으로 집중화되는 방향으로 심화되고 있다. 전문직에서 젊은 세대의 상대적 점유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고령자의 과다점유경향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자의 점유율이 높았던 고위 행정·관리직에서 고령자의 점유도는 쇠퇴하고 있다. 고령자의 점유가 단순노무직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곡선의 변화도 일하는 노동자의 특성이 주변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근속기간이 짧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당 임금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 임금연령 곡선이 최근으로 올수록 완만해진 것은 생애임금 결정방식이 연공식에서 능력별로 변화된 것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령노동특성이 단기간, 저임금, 저생산력의 특성으로 변화된 현상과 더 연관이 깊다고 논의되고 있다(장지연, 2003).⁷⁴⁾

고령자 노동을 주변화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이 임금근로자의 조기정년제이다. 대

74) 장지연. 2002. 「한국의 고연령자 노동시장」,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3차 KLI-JIL 국제워크숍』.

_____. 2003a.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_____. 2003b. 「중고령자의 경력이동」. 『한국사회학』. 37/2: 95~123.

부분의 기업이 55~58세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임금근로자가 정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주요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른바 '사오정'이라는 신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듯이 40대나 50대 초반에서 명예퇴직이 빈번하며 중고령층의 실업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조기정년의 결과, 노년기에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계층은 도시부문의 하층, 자영부문, 농업부문 등에 집중화되고 있다. 또한 주된 일에서 완전은퇴로 이행하기 전 머물 수 있는 중간적인 일거리의 기회가 전무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현격한 지위 하락을 감수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정규임금근로자가 은퇴 후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같은 고령노동력의 조기퇴출과 주변화는 연령과 생산성의 부정적 상관에 대한 신화에 의해 더욱 조장되고 있다.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는 이유로 건강이나 지적 능력에서 노쇠함을 지적한다. 연장자에게 일을 시키는데 거북한 면이 있으며, 연공서열식 임금 때문에 생산성에 비하여 임금이 더 많은 비용문제가 흔히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는 노화와 생산성의 관계나 연령에 따른 임금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결여한 채 노년 노동의 비정상성을 당연하게 전제한다.

제 4 절 맺음말

가족중심성과 강한 노동 욕구는 현 한국 고령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형성 이면에 모호성과 긴장이 크다. 가족 관계의 변화는 압축적이었으며 현재 다양한 가족관계가 공존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관계, 호혜적인 지원관계, 정서적 애착이 약하지만 물질적/도구적 지원관계를 유지하는 가족관계, 그리고 물질적/정서적 고립의 징후도 크게 나타난다. 다양한 가족 관계의 공존은 서로 상호작용을 크게 하여, 가족 정체성의 혼돈을 더욱 크게 한다. 이러한 혼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적극적으로 가족과 개인생활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가족 가치를 복구하고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는

한편 노인부양에 있어 가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족 응집성에 대한 집합의식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고, 지금도 개인과 사회적 관계를 주요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족의 가치는 최근까지 공격당하지 않은 요새 안에 안치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이념의 보편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과연 현실적인 일과 재생산역할의 양립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부양역할의 사회화의 요구에 진지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현재 선진사회의 다양한 복지정책 제도들이 연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례 연구가 미국, 일본 등 몇몇 사회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그 사회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의 효과, 효율성을 판단하여, 이들 사회구조의 특성을 무차별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식하는 결과를 조장하기 쉽다. 세계화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효율성, 재정안정화 논의는 한국사회에 전이되면서 복지빈곤 상황을 면책하는 논의로 둔갑되고 있다.

노년기 정체성의 긴장과 물질적/사회적 배제는 생애 자율성을 억압하는 가족, 노동관계의 모순구조에서 배태되고 있다. 상품화되고 분절화된 노동-가족화된 재생산 활동의 긴밀한 공조관계에서 한편으로 가족의 도구적, 물질주의적 기능이 강화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노동 소외가 심화되었다. 가족중심의 재생산 역할, 상품화된 노동은 국가 수준의 저비용 복지체제를 이끈 두 바퀴였으며 젠더불평등과 함께 노인빈곤화와 연령주의를 조장한 불평등의 주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가족과 개인은 탈제도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였다. 근대가족의 이념은 발전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강제되었으며, 확대가족의 이념 또한 복지저비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제되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공존은 압축변동에서 단순히 우발적으로 공존한 것이 아니라, 가족중심의 부양 및 세대간 지원관계를 강제한 제도적 권력개입에 의해서 강제되었고 급기야 생애규범으로서 보편심성으로서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정치, 사회, 문화적 지형에서 세대의 생애경험에 단절이 심한 것은 흔히 압축변동의 결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세대간 분리현상이 경제, 정치, 문화적 수준에

서 중층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급격한 정치, 경제, 문화 변동속에서 생애가 너무나 쉽게 강제화되고 제도화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세대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수준에서 압축변동을 이끌기 위해 요구되었던 제도화된 생애 및 사회적 관계의 탈골현상이라고 사료된다. 현재의 세대 긴장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생애 제도화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 가족긴장과 세대갈등의 해결사로서 공공권력의 개입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관계의 왜곡을 초래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활동적 노년기의 논의도 새롭게 각색된 생산성중심 논의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유능하고 활력 있는, 아직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체 어떠한 인력을 의미하는가? 우려되는 현상은 고령 노동촉진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 고령노동에 눈을 돌리고 있는 업종은 주변적이고, 자체 경쟁력이 떨어진, 저임금의, 열악한 고용조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노동의 연령 장벽이 지배적인 한, <70세 현역사회> 지향정책은 자칫 많은 빈곤하고, 소외된 고령자를 주변적 노동자로 몰아넣은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재의 고용불안, 노동시장의 연령장벽, 생산적 복지가 장려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우려를 결코 기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중심 사회구조에서 억압되고 왜곡된 여가, 교육, 노동, 가족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과 부양역할을 구분하여 협의의 의미에서 생산성 비용을 분석하는 관점에서 재생산의 공공재를 충분히 고려하는 관점에서 생산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적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노년기의 노동권을 보장하느냐, 복지권을 보장하느냐의 문제에 앞서, 어떠한 노동권이냐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 저 자 소 개 ●

박 경 속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석사
- 미국 Brown University 사회학 박사
- 현 동아대학교 사회언론광고학부 조교수
- 주요저서: 이미 진행된 미래(2003), 의암출판

04-18

노령화와 세대

2004년 2월 일 인쇄

2004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이 주 현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문화
